

2010년 업무계획 보고

이 자료는 2009년 12월 30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업무계획

-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

2009. 12. 30.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목 차 =

I. 2009년 추진실적 평가	1
II. 2010년 여건 전망과 정책방향	7
III. 주요 추진과제	13
1. 경영혁신 · 소득증대	15
(1) 농어업 경영혁신 · 비용절감	15
(2)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절감	21
(3) 농어가 소득 · 경영 안정	24
(4) 농식품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	29
2. 체질개선 · 미래준비	33
(1) 녹색 성장 및 농식품 R&D 혁신	33
(2) 종자 · 생명산업 육성	36
(3) 농정추진체계 개편	39
(4)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49
(5) DDA/FTA 대응	51

3. 안전식품 · 안정공급	54
(1) 친환경 안전 농식품 공급	54
(2)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	60
(3)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64
(4) 해외 농림어업 협력 강화	71
4. 지역경제 활성화	74
(1) 농어촌 산업 육성	74
(2) 지역 공동 경영체 활성화	77
(3) 농어촌 복지 · 생활여건 개선	80
(4) 농림어업 생산기반 확충	85
(5)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	89
IV. 과제별 주요일정	93
<참 고> 2009년 업무계획 추진실적	101
<별첨1> 농촌진흥청 핵심 추진과제	113
<별첨2> 산림청 핵심 추진과제	127

I . 2009년 추진실적 평가

1. 성과

① 농어업 선진화 기반 마련

- 농어업계 · 소비자 · 정부가 참여하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소통과 거버넌스의 기틀 마련**(공동발표문 채택, '09. 7)
 - 보조금 개편원칙, 직불제 개편 등 42개 주요과제에 합의
- **농협개혁의 1단계로 운영구조 개선 농협법 개정**('09. 4월)
 - 2단계로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추진 중('09. 12월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 * 수협법 개정안 국회 농식품위 계류중('09.4월 국회 제출)
-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농지법 개정, 11.28)
 - 한계농지 소유 · 전용규제 완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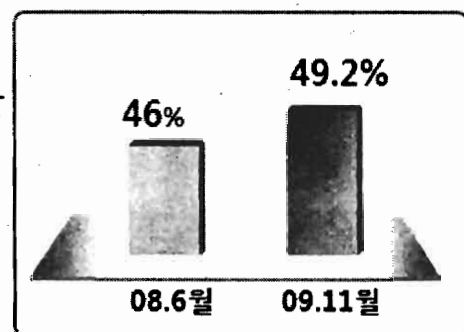
② 현장 수요자 중심의 농식품 R&D 추진체계 개편 추진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4월), 농식품 R&D의 총괄조정 및 평가 기능체제 구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구성(4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10월)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9월) 등 추진체계 구축
 - '농림수산식품 R&D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12월)

③ 식품안전 및 유통투명성 제고로 소비자 신뢰 향상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강화('08.7월), 쇠고기 이력제 확대('09.6월) 등
 - '08.6월 미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국내산 쇠고기 시장점유율 상승**
- GAP · HACCP 등 생산단계 위해관리 시스템 및 안전성 조사 강화
 - * 안전성 적합률: (농산물) 97.6%, (축산물) 99.9%, (선진국) 98~99%

국내산 쇠고기 시장 점유율



4] 식품산업 발전기반 마련 및 농식품 수출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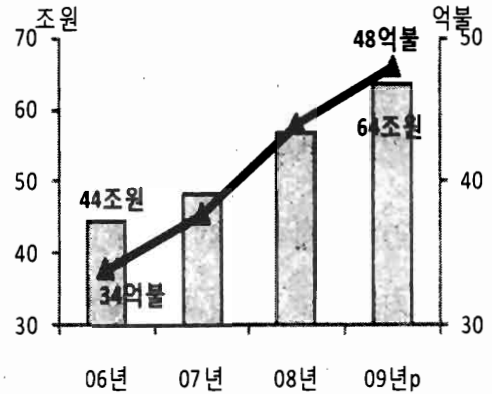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 김치연구소 입지선정(7월), '우리술 산업대책' 및 '쌀 가공산업 대책'(8월), 천일염 관리업무 이관(3월) 등

○ 농식품 수출 7% 증가(48억불)

* 11월까지 막걸리 수출 43%, 천일염 수출 119% 증가

○ 한식세계화 붐 조성

* 막걸리 2009 히트상품 1위



5]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강화

○ 농기계 임대사업(농협) 활성화로 농가부담(3.6천억원) 경감

- 지역농협에 임대 전담센터 670개소를 설치, 논농사용 중고농기계 매입(15.7천대) 및 28천ha 농작업 대행

○ 경영이양직불 지급연령 상향조정(70→75세) 등 각종 직불제 확충

○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강화('08 : 1,195억원 → '09 : 1,700) 및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개편('08 : 28품목 → '09 : 34)

○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 면세유(1.9조원), 화학비료(1,508억원), 사료(1조원 용자) 등 농어가 긴급 경영안정 지원

6] 해외농어업자원개발 및 국격제고를 위한 해외협력 강화

○ 민간주도 식량·사료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6월)

* 농지관리기금에서 민간의 해외 농어업개발 지원(09: 11개 사업, 240억원)

○ 한·러 정상회담('08.9)의 성과로 양국간 불법어업방지 협정을 체결('09.12), '10년 명태쿼터 45천톤 확보('07년 대비 120% 증대)

○ 정상외교를 통해 인니(3월), 캄보디아(10월)에 40만ha 조림지 확보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 합의(6월)

2. 반성

①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가 소득정체에 대한 대책 미흡

- '08년 농가소득은 '04년 대비 5.2% 증가에 그친 반면, 농업 경영비는 11.1% 증가

* 농가소득 : (04) 29,001천원 → (08) 30,523

* 농업경영비 : (04) 14,572천원 → (08) 16,189

② 생산 조절 및 사전예측 미흡으로 쌀 등 농수산물 수급불안 반복

- 쌀(평년 20만톤, '09년 40만톤 잉여), 배추(58천톤 시장격리) 등

③ 어선세력 과잉(약15%초과), 어장오염 등으로 수산업 경쟁력 약화

④ 기후변화 대응 자연자원 관리 및 환경보전에 정책적 관심 확대 필요

- 재배적지·어족자원 변화, 해파리·꽃매미 피해 발생 등

- 투입재(비료, 농약, 에너지 등) 집약형 생산방식으로 환경부하 가중

* 비료사용량 OECD 4위(396.1kg/ha, '05.기준), 농약사용량 1위(12.9kg/ha, '06.기준)

⑤ 식품산업육성정책은 초기단계로 가시적 성과 미흡

- 막걸리·천일염 등 일부품목이 부각되었으나, 규모화·산업화에 한계

⑥ 농어촌 복지·생활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격차가 큰 상황

* 노후주택비율 : 도시 9.1%, 농촌 24.5 병원 1개소당 인구 : 도시 866명, 농촌 1,367

Ⅱ. 2010년 여건 전망과 정책방향

1. 여건 전망

□ 달러 약세 전망에 따라 유가·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 강세 예상

* 국제유가(두바이유) : ('09) 연평균 61~62불/배럴(KIEP) → ('10p) 80불 내외

□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적인 대응 본격화

○ 선진국의 탄소세 부과 등 녹색보호주의 강화 추세

* 프랑스는 2010년부터 17유로/CO₂톤(약 3만원) 부과

○ 우리나라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09.11월)

* 감축목표 :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 DDA 협상/ FTA 확산 등 개방경제 추세 가속화

○ G20 정상회담('09.11월)에서 2010년까지 DDA 협상 타결 목표 설정

○ 우리나라는 미국·EU(협상타결), 호주·뉴질랜드·페루(협상 본격화), 콜롬비아(협상 개시) 등 FTA를 동시 추진

□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격제고 노력 본격화

* 총리실 주관 '국격제고 정책 추진 TF' 구성('09.10월)

□ 식품안전, 귀농·귀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클 전망

〈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 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지지도는 매우 높음
 - 도시민의 89.3%가 국가경제에서 앞으로도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식
 - 가장 중요한 농업·농촌의 역할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농가소득 안정'을, 전문가는 '후계인력 육성'을 각각 주문
 - ② 2009년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에 대하여,
 - 가장 성과가 높은 정책으로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을, 성과가 낮은 정책으로 농가경영안정대책을 선택
 -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농산물 안전성과 후계인력 육성(전문가), 연금지원과 직불제 확대(농업인)를 선택
 - ③ 농가경영 주된 위협요인은 생산비 증가(32.0%)와 인력부족(19.5%)
 - ④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도 높은 평가
 - 도시민의 62.5%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
 - 83.8%가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고 인식
 - ⑤ 도·농간 거주환경 만족도 격차는 19.4%p로 여전히 크며, 특히, 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는 15.1%로서 매우 낮은 모습
 - 거주환경 만족도 : 도시민 56.2%, 농업인 36.8%
 - 삶의 질 만족도 : 도시민 22.6%, 농업인 15.1%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민·농업인·전문가 2,470명 설문조사(09.10~11월)

2. 중심 추진방향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매력적인 농림수산물산업



경영혁신 · 소득증대

- ▶ 농어업 경영혁신 · 비용 절감
- ▶ 농어업 에너지 절감
- ▶ 농어가 소득 · 경영 안정
- ▶ 농식품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

체질개선 · 미래준비

- ▶ 녹색성장 및 농식품 R&D 혁신
- ▶ 종자 · 생명산업 육성
- ▶ 농정추진체계 개편
- ▶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 ▶ DDA/FTA 대응

안전식품 · 안정공급

- ▶ 친환경 안전 농식품 공급
- ▶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
- ▶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 해외 농림어업 협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 ▶ 농어촌산업 육성
- ▶ 지역공동 경영체 활성화
- ▶ 농어촌 복지 · 생활여건 개선
- ▶ 농림어업 생산기반 확충
- ▶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

Ⅲ. 주요 추진과제

1. 경영혁신 · 소득증대

1 농어업 경영혁신 · 비용절감

가 총체적 비용절감

(1) 추진 방향

- ◇ 품목별 낭비요인을 발굴하여 '12년까지 최대 30%까지 절감
- 주요 품목별로 비용절감 목표 및 수단을 명확히 제시

- 비용절감운동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지원
 - (농어업인) 경영체의 CEO로서 경영비 절감노력 자발적 전개
 - (정부) 사례 발굴 전파, 교육, 정보화 및 미래비전 제시 등으로 비용절감 분위기 확산

단 계	민간(품목단체)	정부(비용절감본부)
1단계 (모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사례 발굴 및 체계화(신기술/공동영농 등) ◇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 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비용구조 분석 ◇ 전과체계 구축(사례집 발간 및 배포/기관간 네트워킹) ◇ 시범농어가 발굴
2단계 (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가 記帳, 전산화 유도 ◇ 농어가 법인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 비용절감 교육, 경영컨설팅 강화
3단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절감 신기술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우선순위를 비용절감으로 설정 ◇ 연구결과 현장적용(기술센터/농협 등)
4단계 (선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창출을 위한 신투자 집행 ◇ 경영체별 경영개선계획 수립(사업다변화/시장개척/신시장 창출·신제품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시장개척/선물거래/생산비 안정장치/인센티브 등) ◇ 평가와 환류(모니터링)

(2) 추진 방안

□ 품목별 비용분석 및 비용절감 사례 발굴·전파 체계 구축

- 경영규모, 경영주 연령, 경영수준 등에 따른 경영비 분석(3월)
- 언론과 연계,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 관련 정기 기획기사 게재
 - (가칭)'농어업 자린고비 공모전'을 개최 비용절감 농어가를 발굴하고 포상·상금·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농수협, 품목단체, 컨설팅업체를 활용, 우수사례 발굴·전파
 - 농어업인 교육에 기장 및 비용절감 프로그램 확대

□ 경영혁신의 기초가 되는 농어가 기장(記帳) 운동 전개

- 현재 5%미만 수준인 농어가기장 비율을 '12년까지 20%로 확대
- 정부지원사업 대상 농어가는 회계교육 이수 및 기장 의무화
- 농어업 경영체 유형별·품목별 회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선진국 수준의 기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분야별 전국 단위 대표실습장 체계 구축
 - 원예전문실습장(경남 진주 ATEC), 축산전문실습장(전남대, 천안 연암대학), IT 기반 첨단농업교육센터(순천대)
- 선도농어가 실습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전국 선도농어가의 농장·양식장을 현장 실습장으로 지정
 - 선도 농어업인을 현장교수로 임명하여 전문 기술과 노하우 전파
 - * 농어업인 품목교육, 농·수산고·농·수산대 실습교육장으로 활용

□ 가공·유통단계 비용절감, 조직화·계열화, R&D 등을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지속 추진

나 비용절감운동본부 및 농어업경영혁신단 설립

◇ 민·관 합동 「비용절감운동본부」와 지역단위 「경영혁신단」을 설립, 비용절감 운동의 추진동력 부여

- 비용절감운동본부는 품목조직, 농수협, 컨설팅업체,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으로 구성(3월)
 - 농어업인 단체 등에 의한 자발적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
 - 주요기능(예시) : 사례 발굴 및 전파, 농어가기장 및 전산화 운동, 평가 및 환류, 제도개선 과제 발굴

운동본부 설립준비

운동본부 설립

농어업생산성본부로 발전

· 1~2월

· 발대식 개최(3월)

· 지속 추진

- 비용절감운동을 현장에서 주도할 「농어업경영혁신단」 구성(6월)
 - 품목조직, 농·수협, 시·군기술센터,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중 비용절감운동본부 위원회에서 선발
 - 후보자는 품목별 소득 10% 이내 농어가, 신기술 보유 농어가, 신지식 농어업인 등
 - '10년중 3,000명 내외의 제1기 혁신단 구성
 - 1기 혁신단 구성후 한국농수산대학이 주관하는 품목별 경영 혁신 과정 교육 실시 및 컨설팅 지원
 - 혁신단원은 현장 농어업인과 연계를 통해 경영혁신 사례 전파
 -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절감운동본부에서 지원하고, 정책자금 등 지원시 인센티브 부여
- 제2기 혁신단은 제1기 혁신단원이 추천한 농어업인(영농승계자 포함) 중에서 선정하고, 이후 지속적 확산

다 2010년 경영비 절감 계획

◇ 2010년 경영비 비중이 높은 사료비 6%(4,600억원), 비료비 11%(1,000억원) 등 절감추진

□ 사료비 : 한우 · 양돈 · 양계 등

- 초음파 육질 검사를 통해 출하시기 3개월 단축,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급여 확대('09 : 40% → '10 : 60%)
- 써코백신 접종, 시설 현대화, 질병근절 등으로 MSY (모돈당 시장 출하두수) 향상, 성장단계별 적정 사료량 급여
 - * 돼지사료 급여량 : (부진농가) 356kg/두 → (우수농가) 290(감 18.5%)
- 소형닭(1.5kg) 위주의 생산체계를 대형닭(2.5kg이상)으로 전환하여 부분육 생산 확대
 - * 국별 출하제중(kg) : 한국 1.5, 일본 2.7, 중국 2.5, 미국 2.1

□ 비료비 : 벼, 채소, 특용작물 등

-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 전국 확대 공급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비료비 11% 절감
 - 비료대 절감 : ('09) 9,134억원 → ('10.P) 8,090(△1,044)
- 관행적인 화학비료 사용습관 개선에 사업초기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비료 지원
 - 관행 화학비료지원은 중단하고 맞춤형비료 지원으로 적정사용 유도
 - 시비효과 홍보 및 우수 지자체 평가를 통한 시상금 지급으로 맞춤형비료 조기정착 유도

◇ 주요 품목별로 조직화·규모화, 시설현대화, 에너지절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경영비 절감대책** 추진

□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으로 12년까지 경영비 10%(8,971억원) 절감

○ 들녘별 경영체 1,400개소를 쌀농업 주체로 육성(100ha이상 규모) 하여 쌀 생산의 50%이상 담당

- 들녘별 경영체 지도자 등 쌀농업 경영 CEO 3천명 육성('12)

○ 농기계임대사업소 350개를 육성하고, 농기계 은행사업에 1조를 지원하여 벼농사 농작업 대행비율 확대

- 농기계임대사업 및 대행비율 : ('09) 134개소/3% → ('12) 350/10

□ (한우) 조사료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12년까지 경영비 30%(8,223억원) 절감

○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연중공급체계 구축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조사료 급여 확대('09 : 40% → '12 : 60%)

- 조사료 재배면적 : ('09) 241천ha → ('12) 370

○ 출하 전 초음파 육질 검사를 통한 출하시기 단축(30개월 →27), 번식우 분만간격 단축(15개월 →13), 폐사율 감축 등

□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등으로 12년까지 경영비 20%(5,500억원) 절감

○ 광열동력비 절감을 위해 온실규모·종류·여건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 지열(대규모·자동화 온실) : ('09) 91ha → ('12) 857
- 목재펠릿(중·소규모 온실) : ('09) 0ha → ('12) 1,164
- 에너지 절감시설 : ('09) 4,682ha → ('12) 6,964
- * 온실면적('08) : 전체 53천ha, 가온 14천(대규모·자동화 6.3, 중소규모 7.7)

○ **유리·비닐온실 현대화 및 정밀제어 시스템 보급을 통해 인건비 절감 및 생산량 증대**

-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 : ('09) 145ha → ('12) 1,376
- 자동화 온실 면적 : ('09) 7,508ha → ('12) 9,308
- 정밀제어 시스템 면적 : ('09) 2,668ha → ('12) 3,718

□ **(사과) 노동 절감형 재배기술 보급 등으로 '12년까지 경영비 20%(1,029억원) 절감**

○ **노동력 절감형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

- 사과 적화제 사용으로 적과시간 단축 등
- * ('08) 67.4시간/10a → ('12) 47.2(30% 절감)

○ **생산기반정비를 통한 노동효율화 및 농작업 기계화 촉진**

- 과수주산단지 등을 대상으로 용수로, 배수로, 경작로 등 정비

□ **(넙치) 우량종묘 육성,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등으로 '12년까지 경영비 20%(788억원) 절감**

○ **속성장 육종넙치품종을 당초계획 보다 3년 앞당겨 10년부터 단계적 보급**

- * 생산기간 4개월 단축 : ('08) 12~14개월 → ('12) 8~10개월

○ **내병성 육종넙치품종의 조기 개발 및 보급으로 생존율 향상**

- * 생존율 20% 향상 : ('08) 60% → ('12) 80%

○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로 사료효율 향상에 의한 경영비 절감**

2 농어업 에너지 절감

가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추진
 ※ '12년까지 농어업용 에너지 13%(37백억원)절감 ('10년:4.7%, 10백억원)
 -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으로 7.3%,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5.7%

(1) 농어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

-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스템 보급 확대 추진
 - 중·소규모 온실 700ha에 다겹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 * 에너지 절감율(%) : 열회수형 환기장치(50), 다겹보온커튼(46)
 - 채낚기 어선 217척의 집어등을 LED로 교체(66%절감), 노후어선 저효율 기관 교체(1만마력) 및 근해어선 감척사업(194척) 추진
- 온실가스 감축 및 유류사용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본격 보급
 - 대규모·자동화 온실 250ha에 지열난방 보급, 난방비용 73% 절감
 - 중·소규모 온실 160ha 및 농가주택 4천호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에너지 절감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누적)>

구 분		'09년까지	'10년	'12년	
에너지 절 감 시스템	에너지절감시설(ha)	4,682(33%)	5,382(38)	6,964(50)	
	고효율LED(척)	217(3.2%)	434(6.4)	868(12.9)	
	노후어선 기관교체(마력)	1만(0.6)	2만(1.2)	4만(2.4)	
	근해어선 감척사업(척)	567(15.7%)	761(21.0)	1,280(35.8)	
신재생 에너지	지열난방(ha, 대규모온실)	91(1.4%)	341(5.4)	857(13.6)	
	목재 펠릿	중·소규모온실(ha)	-	160(2.1)	1,164(15.1)
		주택(천호)	3(2.1%)	7(4.9)	39(27.3)

(2)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기관 실천과제

-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조명시설 교체 및 고효율 차량 도입
 - 농식품부 청사,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노후 조명 시설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 : ('09) 20% → ('10) 25 → ('11) 30
 - * LED등은 기존등 대비 약 50%정도 전력 절감, '09년 대비 '11년 전등 사용 전력량 약 7.5% 절감효과
 - * 전등 사용전력량(청사2동 기준) : ('09) 565,408 kwh → ('11)537,138 kwh(5% 절감 예상)
 - 내구연한 도래 차량의 신차 교체시 하이브리드 차량 및 경차 우선 구매('12년까지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50% 보유)
-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 점심시간 소등, 불필요한 전열기 제거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실천 등 에너지 절약의 상시화
 - 매주 수요일을 “그린데이”로 지정하여 정시퇴근 시 연간 6,605 kwh 절약 예상(727천원, 본부청사 기준)
 - 점심시간 1시간 소등으로 연간 16,474kwh 절약 예상(1,812천원, 본부청사 기준)
 - 1인 1컵 사용하기 실천, 불가피하게 사용한 종이컵은 회수 재활용
 - 수거한 종이컵은 청사관리소에서 일괄 수거·재활용
 - * 종이컵 회수대 설치완료(본부 : '09.12월, 관련기관 : '10.1월)

□ 각 기관·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지정, 운영

기관명	주요 추진 과제
농진청	○ “그린데이” 지정(수요일), 탄소포인트제(www.cpoint.or.kr) 참여
산림청	○ 화장실 자동점등시설 설치, 절수형 수도 및 소변기 교체
종자원	○ 전기 5%절약, 용수 약 2.4%절약 등 세부계획 수립·추진
서해사무소	○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의 구성·운영
동해사무소	○ LED 보급, 운항시스템 및 지도·단속방법 개선
농업연수원	○ 고효율 조명기기, 조명 자동제어기 등 우선 설치
수의검역원	○ 절수장치 장착 및 절수의 생활화 지속홍보
농관원	○ 모든 청사 건물에 LED 및 고효율 조명등 설치
식물검역원	○ 식물 격리재배 온실에 블록별 구분 난방 실시 및 가림막 설치
농어촌공사	○ 태양열·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유통공사	○ 공조시스템 변경으로 제1전시장 전력사용량 20% 절감
한국마사회	○ 매주 수요일 ‘맵시데이’ 두툼한 간소복 착용, 자전거 보급, 태양열 활용

나 목재펠릿 보급 확대

- ◇ 목재펠릿의 화석연료 대체를 확대하여 농산촌 지역의 연료비 절감('12년 789억원)과 온실가스 감축('12년 1백만톤)에 기여
 - 목재펠릿의 연료비는 경유의 56%, 보일러 등유의 82%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을 구축하여 목재펠릿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성 제고

○ 숲가꾸기의 집단지화, 산물수집의 기계화로 경제성 확보



□ 목재펠릿의 체계적인 수급관리

○ 원료와 수요처를 고려, '12년까지 총 40만톤의 생산시설 확충

- '10년 목재펠릿 제조시설 8개소 신설('10년말 총생산능력 年 20만톤)

* 펠릿제조시설('10년) : 여주, 양평, 포천, 동해, 태백, 정선, 연기, 단양, 청원, 괴산, 화순, 군산, 무주, 김해, 산청, 사천, 거창, 포항 등 18개소

○ 농산촌 난방용 보급에 주력하고, 발전용 수요에 체계적 대응

- 농가주택 펠릿보일러 : ('09) 3 → ('10) 7 → ('12) 39천호

- 시설원에 펠릿 난방 : ('09) - → ('10) 160 → ('12) 1,164ha

- 펠릿혼소발전 시범사업 : ('09) 유동충형 → ('10~'11) 미분탄형

□ 목재펠릿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보급초기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펠릿 품질표시 및 보일러 인증

○ 부가세 감면 추진, 지역유통망(산림조합) 구축 등으로 이용여건 개선

3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가 직불제 확충

◇ 공익형 직불제 기본계획 마련 및 시범사업 준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상연습 실시

□ 현행 9개 직불제를 공익형 및 경영안정형 2가지 유형으로 통합·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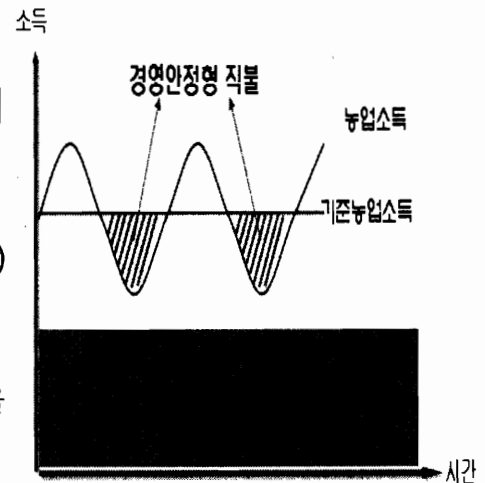
○ 공익형 직불제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중소농의 기본적 소득보전

○ 경영안정형 직불제(농가단위 소득안정제)

: 주업농의 경영위험 완화

* 시범사업을 거쳐 직불제 통합·확충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정비



□ 공익형 직불제 기본계획 마련(6월) 및 시범사업 실시

○ 논농업에 한정된 고정직불을 전체농지로 확대하고, 상호준수의무(Cross compliance) 부과 등 지원요건 강화

*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은 가산형 직불 형태로 운영

○ '11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 추진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상 연습을 통해 본사업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희망농가(약 5,000호)를 대상으로 농가별 농업소득산정 방법 및 소요예산 파악, 프로그램 개발 등

○ 9개 도별 1개 읍·면, 쌀·사과·한우 등 9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도상연습 실시(6월 ~10월)

* 연도별 대상품목 확대 : ('10) 9개 품목 → ('11) 20 → ('12) 30

□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연계, **경관보전직불제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농어촌의 경관보전을 유도

○ **경관보전직불제**를 마을경관개선활동 지원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 '농촌경관계획수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현행) 작물보조금 성격 → (확대) 경관·역사·문화자원 보전활동 포괄지원

* 사업예산 : ('09) 9,640백만원 / 16,171ha → ('10) 15,679 / 16,600

□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의 효율적 개선**

○ 조건불리직불금 지원단가를 25% 인상하여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과의 소득격차에 대한 보전 강화

* 지원기준단가 : ('09) 밭 40만원/ha, 초지 20만원/ha → ('10) 50 / 25

○ 마을공동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원

- 마을별 우수사례집 발행 및 보급(3월),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4~6월)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실시방안 검토

○ 육지생활 중심권에서 8km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공익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어가단위 소득안정제는 어업경영체 등록('10 -'11년)이후 검토

나 농어가의 경영회생 지원 확대

- ◇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 농어가의 자구노력을 중점 지원
 -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획일적 부채경감 대책은 지양

□ '08년말 기준 농어가 부채 규모는 33.6조원으로 추정(통계청)

- 농가부채 총 규모는 31.2조원이며, 호당 평균 25,786천원으로 '07말(29,946천원) 대비 4,160천원 감소*(Δ 13.9%)

* 농가부채가 감소한 것은 통계청 표본개편에 따른 시계열 단층현상으로 파악

- 어가부채 총 규모는 2.4조원, 호당 평균 33,587천원 수준

□ 소규모 농가 등 더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요건 개선 및 예산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기준 완화(4천만원 이상 \rightarrow 3) 및 부채 대비 지원배수 조정(부채규모의 1.2배 지원 \rightarrow 1배)

- 농지 외에 농업용 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까지 매입 확대

- 신청자의 부동산·금융자산 확인을 강화하여 사치성 자산 보유자 지원 제외 등 적격 대상자 선정·지원

* 사업예산 : ('09) 1,700억원 \rightarrow ('10) 2,300(증 600)

□ 농어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 저리(3%, 3년 거치 7년 분할)자금으로 대체하는 농수산경영회생자금 확대('09 : 400억원 \rightarrow '10 : 600)

다 재해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 상해, 자연재해 등 농어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위험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영어·영농 기반 마련

□ 재해보험 대상품목·대상재해·적용범위 확대

- 농작물(5), 축산물(1), 수산물(1) 대상품목 확대('09 : 34 → '10 : 41)
- 자연재해 및 병충해, 조수해(鳥獸害)를 대상재해에 포함하고 보험대상을 농어업용 시설물(비닐온실, 축사)까지 전면 확대
 - *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 개정('10.1월 시행)

□ 재해보험 및 공제의 실효성 제고

- 보험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보험홍보 강화 등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농작물, '09 : 31.4% → '10목표: 32.5%)
- 농작업 중 상해사고에 대비, 고용주가 가입하는 농작업 근로자 상해보장공제 시범지역 확대('09 : 9개소 → '11 : 25개소)
- 재해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상수준 확대 및 상품개발 지속
 - 보상수준을 '14년까지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60→100백만원)
- 어선원 보험 단체가입시 인센티브를 제공, 소형어선 가입률 제고

□ 적조 발생 대비를 통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 추진

-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어류 방류사업 신규 추진('10, 300백만원)
 - 지속적 질병관리 및 환경 수용력 등을 고려한 분산방류 추진
-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 적조발생 우려해역 중심으로 예찰 강화
 - 광역예찰(월 2회) 및 지자체 중심 연안예찰(매일) 실시

라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 농작업 대행을 확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농작업을 개발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임대사업 정착

□ 밭농사용 임대사업소(정부) 확대설치로 기계화율 향상

○ 정식·수확작업 등 기계화가 낮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 농작업별 기계화율 : 경운·정지 96%, 파종·이식 11, 비닐피복 22, 방제 90, 수확 8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50개(250억원) 추가 설치('10, 184개소)

- 기종 다양화 및 충분한 수량 확보로 임대수요 변화에 대응

□ 벼농사용 임대사업(농협)은 파종에서 수확후 관리 작업까지 One-Stop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확충

○ '10년부터 매입 농기계와 신규농기계로 임대사업 활성화

- 신규 농기계 구입 : ('10) 750억원 → ('11) 750 → ('12) 500

* 중고농기계 매입완료('09) : 15.7천대, 3,000억원

○ 농작업 직영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농작업 대행을 확대

* 직영조합 : ('09) 16개 조합 → ('10) 40 → ('12) 200 → ('14) 300

- 농작업은 '09년 벼 재배면적의 3%에서 '10년 6%까지 확대

* 농작업 면적 : ('09) 28천ha → ('10) 56 → ('12) 95(벼 재배면적의 10%)

○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로 사업 정착

* 경운·정지, 이앙, 수확 중심 → 방제, 육묘, 파종, 건조 등 일관작업 체계 구축

4 농식품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

가 농식품 수급안정

◇ 민간의 자율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혁신으로 농식품 수급을 안정

- 농식품 가격 등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동향 점검, 선제적 대응
 -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 농식품 50품목 중점 점검·관리
 - * 농산물(10), 축산물(4), 수산물(3), 가공식품(30), 외식메뉴(3) 동향 주기적 점검
 - 원자재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물가인상을 최소화
- 농어업 관측을 고도화·정밀화하여 재배면적 조정 등 활용도 제고
 - 관측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 급등락이 큰 6개 품목에 대해 3~6개월 이후의 정보를 제공하는 선행관측 도입(1월)
 - * 관측품목 확대 2품목(버섯, 오리), 선행관측 6품목(무, 배추, 양파, 파, 돼지고기, 닭고기)
 - 인공위성을 활용한 농업관측 시범사업 전개
 - 벼를 대상으로 작황 및 수확예상량 등 원격관측
 - 도·소매가격 조기에보지수 개발(1월) 등 조기에보시스템 구축(3월)
 - * 조기에보지수 :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 예보
- 계약재배와 자조금 운영 내실화로 민간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 가격 등락이 심한 채소·과실(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량의 10% 수준 물량을 계약재배('10년 : 1조 280억원)
 - * 채소 13(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감자, 오야, 호박, 풋고추, 토마토, 가지), 과일 4(사과, 배, 단감, 감귤)

○ 28개 품목별 대표조직의 기능을 확대, 수급조절 및 시장 대응 능력 강화

- 출하량 급증시 품목별 대표조직이 회원간 유통협약을 통해 수급관리
- * (사례) '09년 감귤 공급과잉(약 6만톤) 관측결과에 따라 저급품 출하 금지 협약 추진

○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홍보로 농수산물 수요 확대

- * 자조금 지원예산('10) : 원예작물 29품목/85억원, 축산물 9/262, 수산물 5/17

□ 수매·비축사업을 통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 공공비축미, 수매·비축 농수산물*을 탄력적으로 공급

- * 11개 품목 : 농산물 8(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땅콩·콩·팥), 수산물 3(오징어·고등어·명태)

○ 할당·조정관세, 시장접근물량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

□ 제도개선, 국내소비·수출확대 등을 통해 축산물 수급안정 도모

○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전국 쿼터제 도입

- 현행 집유 주체별 쿼터관리 체계를 유지하되, (가칭)'중앙낙농위원회'를 통해 전국 생산량 및 쿼터량을 종합 관리
- * 중앙낙농위원회 설립을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 추진(4월~)

○ 우유 신제품 개발 및 급식 확대 등 소비촉진대책 추진

- 잉여원유(20만톤/년)를 가공원료유로 공급, 고품질 치즈 등 생산 확대
- 노인층 소비확대 등을 위해 기능성 강화 제품 개발 지원(126억원)
- 목장형 유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직판쿼터제 도입(12월)

○ 돼지고기·닭고기 부위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출 확대

- 국내 선호도가 낮은 저지방 부위 수출 확대를 위해 도축·가공장 위생시설 개선 지원(1,100억원)

나 유통구조 개혁

◇ 소비지·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유통주체간 경쟁촉진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유통시스템 구축

□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단계, 짧은 저장기간 등으로 높은 유통비용 발생

○ 해남 월동배추 유통비용('09.4) : 84%(물류비용 등 49, 이윤 35)

* 품목별 평균 유통비용 비율 : 잎채소 71%, 과일 54, 곡물 27

○ 선진국도 채소류 유통비용이 높으나(미국 73%, 일본 68), 저온 유통 등 유통의 질에서 차이

□ 소비지와 산지간 직접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비용 절감

○ 바로마켓·고속도로 휴게소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직거래 장터 확충

* 바로마켓 매출액(80개 업체, 주2일) : ('09) 51억원 → ('10) 80억원

○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조직간 직거래를 위한 자금 지원

○ 사이버거래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B2B 거래 정착

* 사이버거래소 B2B 거래액 : ('09) 30억원 → ('10) 1,000억원

□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대규모 물량 취급이 가능한 농산물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산지·소비지를 수직 계열화

○ 생산자 단체 주도의 전국단위 유통회사를 단계적으로 설립

* 농협의 신경분리와 연계하여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 소비지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인근에 농협물류기지 건설 추진

□ **소매유통 대형화 등에 대응하여 생산자 조직화·규모화**

○ **산지유통활성화·계약재배사업 등 산지유통 자금을 통합**

- 산지유통 관련 사업·자금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6월)

* 유통조직중심 지원, 생산자 - 정부간 매칭펀드 방식 등 도입 검토

○ **시군유통회사 운영 활성화 및 기존 산지조직과의 협력강화 지원**

- 현물출자 허용, 영농조합법인·농협 등 산지유통조직 출자 확대

○ **생산자가 판매까지 공동 책임지는 수탁형 공동계산제 활성화**

□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보수·현대화 등을 통해 유통 효율성 제고**

○ **저온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유통의 질 개선**

* 저온저장비율 : ('09) 19% → ('15) 30%

○ RPC(쌀), APC(청과), LPC(축산) 등에 대해 평가를 통해, 구조 조정·통합·가동율 제고 추진

○ 도매시장 반입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산지 직배송 시범사업 실시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위탁관리 등으로 물류·유통 효율화

* '10년 시설현대화 사업대상 : 서울 가락, 광주 각화, 대전 오정

□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

○ **도매시장법인(121개, '09년기준) 평가를 강화, 규모화 및 경쟁 촉진**

○ **도매법인 판매장려금 차등지급 등을 통해 중도매인의 규모화 추진**

2. 체질개선·미래준비

1 녹색 성장 및 농식품 R&D 혁신

가 저탄소 녹색산업 추진

◇ 농식품산업을 저탄소·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으로 전환

- 농림수산물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 준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농업분야는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1,510만tCO₂) 수준, 산림 분야는 6%(3,600만tCO₂) 흡수

□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감축)에 따라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 및 감축방안 모색

- 농식품 분야별 온실가스 산정 등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10~'13)
- 기업 및 산업체가 산림 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4월~12월)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

- 맞춤형 비료 공급 등 질소 시비량 저감 기술
 - * 맞춤형 비료 지원시 약 163천tCO₂ 감축 추정('10)
- 반추동물 장내발효 및 가축분뇨 처리과정의 메탄발생 저감기술 개발
 - * 저메탄 발생 사료첨가제 급여로 14.8~27% 저감

□ 농산어촌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를 통해 화석연료 대체

-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확충('09 : 39개소 → '10 : 59)
- 비식용 농작물, 해조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 비식용 바이오매스 농작물 품종개발('09~'12) 및 시험재배('13~'18)
 -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 조성('10년 250ha, '19년까지 35천ha)

○ 목재펠릿 등 원료공급을 위한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 * 숲가꾸기/산물수집(누계) : ('09) 25만ha/80만m³ → ('10) 48/190 → ('13) 125/650
- * 바이오순환림 조성 : ('09) 1,663ha → ('10) 6,000ha

□ 바이오매스·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10~'12)**

○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1개소), 산림탄소순환마을(1개소) 시범조성

- * 저탄소 녹색마을 기본설계 추진(3월~12월)

□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고효율 에너지 장비 보급 확대**

○ **녹색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 * 녹색기술인증고시(안)에 '친환경농식품' 등 7분야 42품목, 녹색사업(프로젝트) 고시(안)에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공급사업' 등 3분야 12대상사업 포함

○ 어선 유류비 절감을 위해 **LED집어등 설치(217척), 유류절감장치(200척)** 지원 및 자체연료 이용 **전기 추진시스템** 등 개발·보급

- * LED 집어등으로 교체시 척당 연 17백만원(오징어채낚기), 유류절감장치 설치시 80백만원(트롤어선) 절감 가능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선제적 대응기술 개발**

○ 작물 재배적지 변동 영향평가 및 돌발병해충 등 대응체계 구축

- * 기후변화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영향 분석('09~'11)

○ 재해 적응성 품종 및 온난화 적응 아열대 신소득 작물 개발

- 신종 병해충 대응품종, 생태·고온적응성 품종, 아열대 작물 유망 품종(망고, 오크라 등) 개발

- * 재해적응성·고품질 품종 : ('09)12종 → ('10)13 → ('12)15

- * 아열대 작물 도입·평가(누계) : ('09)5종 → ('10)10 → ('12)20

나 농식품 R&D 효율성·투명성 제고

◇ R&D 기획·관리·평가 관련 운영 시스템 혁신 및 녹색·생명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부처 참여의 중장기 사업 기획

* 수요자중심의 R&D 기획·평가 시스템 도입, 산업분야(7대)별 기술개발로드맵 수립

□ 개편된 농식품 R&D 체제의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에 중점

○ 현장 맞춤형 R&D 확대를 위해 Web 기반형 통합 기술 DB 구축 및 『품목별 기술협의회』 운영

○ 부·청의 연구개발사업(특정 사업·기술군)에 대한 심층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재원계획에 반영

○ 민간 R&D 기반 조성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개발
- 기술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 기술신용보증, 연구성과 인센티브 등

○ 부·청 R&D 사업(공모과제)의 과제관리를 점진적으로 전문관리 기구로 통합하여 중복 방지

- 관계 기관간 R&D 중복사업 조정 '실무협의' 상설화 및 '농과위' 총괄·심의 기능 강화

□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수요를 고려한 투자확대 (05~09년 : 1.1조원 → 10~14년 : 3.2조원)

○ 기후변화대응·에너지 등 녹색성장 지속 지원(10년 : 1,105억원)

* LED 응용 에너지절감 시설·어선, 바이오매스 자원화, 돌발 병해충 대응

○ IBNT 첨단기술 융복합으로 생산현장의 첨단화기술 확보(10년 : 315억원)

* 지능형 첨단온실, 유비쿼터스 농림어업정보시스템, 유해물질자동제거기술

○ 한식세계화, 외해양식, 검역 등 고부가 글로벌 상품화 기술(10년 : 917억원)

2 종자·생명산업 육성

가 종자산업

- ◇ 종자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육종 인프라 구축, 수출시장 개척으로 '20년까지 수출 2억\$ 달성
 - * 종자시장 규모 : (세계) 83조원, (국내) 1조 2천억원

□ 종자산업 R&D 투자 집중 및 관련 연구 통합조정

- 분야별(농업, 축산, 수산, 산림) R&D 기획·조정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 * 분자유종, 수출전용·수입대체 품종개발, 해조류 신품종 등 중점분야 투자 집중
 - * ('09) 542억원 → ('10) 600 → ('15) 917 → ('20) 1,430('09대비 2.6배)

□ 민간의 품종육성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육종기술지원센터」를 설립(9월), 선행기술서비스, 시험장비 공동이용 등 민간 품종개발 지원
- 「방사선돌연변이육종센터」를 설립, 방사선 육종 체계화
 - * 기본·실시 설계('10), 센터 설립(~'12) 후 육종연구 체계화('13)
-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 연구실 및 실험장비를 민간에 임대하여 중소규모 종자업체의 육종기반 마련
 - * 연구용역('10) 후 시설공사 등 사업 추진('11~'13), 업체 입주('14~'15)
- 분야별 육종인력 양성 및 특화대학 지정·운영 추진

□ 농림수산 유전자원 활용을 통한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

- 유전자원 수집·보전·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 * 유전자원 수집확대 : ('08) 206천점 → ('10) 225 → ('12) 234
 - * 3년간('10~'12) 총 70억원을 투입, 식량작물 등 114천점 증식

나 종축·수산종묘산업

- ◇ 우수 종축·종묘 공급 확대로 생산성 향상, 농어가 소득 증대
- 수입의존성이 높은 종축·종묘의 유전자원 자립기반 구축

□ 종축산업 활성화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1월~)

- 우수 씨수소 선발강도 강화 및 우량 암소집단 구축
 -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한우 검정두수 확대('09: 400두 → '10: 500), 젃소 청정육종농가(우량 암소집단) 육성('09: 5호 → '12: 20)
 - * 한국형 젃소 정액 시장점유율 확대('09: 50% → '17: 70)
 - 시·군단위 한우사업단과 연계한 암소개량사업 신규 추진(10개소), 수정란 생산·공급을 위한 고능력 암소개량센터 조성 추진('10~'12)
- 우수 종축시설 인증제 도입 등으로 전문화·청정화 유도
 - 평가결과 우수 종돈장·종계장에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 인증제 제도화를 위한 축산법 개정(1월) 및 세부평가기준 마련(2월)
 - 무병·우수 새끼돼지 공급을 위한 전문원종돈장 시범육성(50억원)
- 한국형 종축 선발체계 구축으로 유전자원 자립기반 구축
 - 한국형 종돈 개발을 위해 종돈장간 네트워크 확대(5개소 → 7)
 - 국산 종오리 개발 추진(6월~), 원종오리장 1개소 육성(12월)

□ '12년 수산품종보호권 설정에 대비, 제도정비 및 품종개발

- 수산종묘 품종보호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양식기술이 확립된 품종을 중심으로 수산품종개발 및 국산화율 제고
 - * 신품종 개발 : ('09) 김4, 넙치1 → ('12) 김6, 미역3, 넙치1, 전복1, 수산관상생물2
 - * 김/미역 국산화율 : ('09) 65% / 85% → ('15) 90 / 95
- 수산관상생물산업 육성 등으로 수산종묘 수출기반 확충
 - * (가칭)수산관상생물산업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10)

다 동·식물자원의 산업화

◇ 미생물·동식물 등 유전자원 DB구축으로 생명산업 정보기반 마련, 동·식물자원에 기반한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화** 추진

* 애완·관상용 동식물시장규모 : ('08) 1.6조원 → ('15) 4조원, 수출 1억달러

□ 동·식물 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관련법규 및 제도마련**

○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9월)

- 곤충산업의 중장기투자계획, 기술교육·전문인력육성, 연구개발 등

* 애완동물시장 ('08) : 우리나라 1조원, 미국 50조원, 일본 12조원

○ 생산의 규모화 및 전문농가 육성, 품종개량을 통한 수출상품개발 지원 등

□ 농림어업, 연구소·대학·행정기관 등 분야별,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미생물, 동식물 자원 등을 통합하여 생명자원 DB구축('10~'12)

○ 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보의 표준화

○ 각 관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요자에게 정보제공

□ 동식물자원에서 **기능성 물질 개발 등 생명공학 연구 강화**('10 : 504억원)

○ 기존의 품종개량·동물치료 뿐만 아니라 기능성물질, 바이오 에너지 소재 분야까지 **연구범위 확대 및 산업화** 추진

- 약용작물, 곤충 등으로부터 기능성 소재 개발('09 : 10종 → '12 : 15)

* 감굴 (인공피부 소재용 겔), 곤충 (항생물질), 실크 (인공 뼈) 등

- 바이오 신약 생산 기축(2종) 개발 장기이식용 돼지(1종) 생산('12년까지)

* 백혈구증식인자생산용 형질전환 돼지, 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돼지

3 농정추진체계 개편

가 협동조합 개혁

(1) 농협 개혁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조속 마무리하고,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

- 농협법 개정 등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추진
 - 중앙회 사업 분리 및 독립법인화(연합회, 경제지주, 금융지주)를 주요 내용으로 농협법을 개정(2월 임시국회)
 - 법 공포 1년 후 시행을 목표로 자산실사, 법인별 인력 및 조직 개편 방안 마련, 자본금 조달 등 후속작업 시행
 - 관련 연구용역 진행 및 농민단체, 중앙회, 조합,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 운영
 -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세제 등 정부 지원방안 마련
- 운영구조개선 및 사업구조개편이 농업인 실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
 - 중앙회의 수익성 경제사업을 분리, 지주회사 - 자회사 체제로 개편
 - 조합공동법인, 연합사업단, 품목조합 등 산지 광역조직 육성 및 지원
 - 도매기능 확충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소비지에서의 농협 역할 강화

(2) 수협 선진화

◇ 수협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영을 조기 정상화하고 어업인을 위해 제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전환

* 수협법 개정안 국회 농식품위 계류 중('09.4월 국회 제출)

□ 중앙회장 및 부실조합장 비상임화 등 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2월)

- (중앙회) 중앙회장 비상임화 및 지도·경제사업 통합,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이사회 기능강화 등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 (일선수협) 부실수협 조합장 비상임 및 간선제 선출, 임원자격 기준 강화, 이용고 우선배당 등

□ 지속적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효율 극대화 추진

- 중앙회 인력·조직 감축, 부실사업장 폐쇄 등 구조조정 추진
- 조직·인력 10% 축소, 판매기능 자회사 이관 및 급여체계 개편 등
- 부실수협(4개)은 '11년까지 단계적 통폐합하고, 부실우려 수협(10개)은 자금지원 및 MOU체결로 고강도 경영개선 목표 부여(5월)
* 완도군수협 계약이전('09.1월) 및 흑산도수협 합병명령('09.10월)으로 통폐합 추진 중
- 일선수협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리 전환 검토
- 부실수협부터 정책자금 중앙회 이관 및 상호금융 건전조합과 통합 등

□ 공적자금(1조 1,581억원)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자산매각 등 수협 자구노력 강화

- 장기적으로 수협 신용부문을 자회사로 분리, 특수은행으로 육성

(3) 산림조합의 건전한 육성

◇ 부실조합의 경영개선으로 조기에 정상화하고, 투명경영 및 경영지도 활성화

□ 부실 또는 부실우려 조합의 효율적 경영개선

- 부실이 심한 조합(순자본비율 $\Delta 15\%$ 미만)의 합병 등 구조조정
-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부실 우려조합(순자본비율 $\Delta 15\% \sim 2\%$)은 경영개선 이행 약정 체결 후 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목표 부여
 - 부실조합 구조개선 계획 수립(4월) 및 경영개선 이행 방안 마련(6월)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경영개선 이행 상황 지도·점검 및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투명한 경영문화 정착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사건·사고 조합은 산림경영지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조합의 클린센터 연계망 구축 및 내부공익신고제 등 확대
 - 사건·사고 유형별 사례 제작 및 내부공익신고제 규정 마련(3월)

□ 산주·임업인에 대한 경영지도 활성화

- 산림버섯 신품종 개발보급, 조합특화 사업 확대 및 목재 펠릿 공급 선도기관 역할 강화
- 산림경영지도 사업평가를 통한 우수조합 지원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 등 경쟁체제 도입
 - 지도사업 평가 지침 마련(6월) 및 인센티브 지원 계획 수립(10월)

나 창조적인 경영주체 육성

(1) 미래 농어업 핵심인력 육성체계 개편

- ◇ 창업자금에 국한된 후계농어업인 지원을 교육·컨설팅·복지 등 종합적인 「창업농어업인 육성사업」으로 전환
- ◇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선발, 영농·영어승계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어촌 사회의 리더로 양성

- 정예 인력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가 선발되도록 기준 개선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교육, 컨설팅, 멘토링, 기술, 창업자금, 주거·양육비 등 종합 지원지침 시행(4월)
 - * 창업농어업인 선정 후 7년 경과시 창업농어업인 육성사업 졸업 제도 도입
 - 기존 후계농·우수농어업인 지원자금을 통합하고 절차 간소화
 - 장기적으로 담보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중심으로 전환 추진
- '10~'12년간 각 100명의 가업승계 인력을 선발하고 점진 확대
 - 경영진단·평가, 승계준비 교육·컨설팅을 거쳐 최종 선발
 - 농수산 고교·대학 졸업생, 귀농·귀어인, 전문농어업인 우대
 - * 개념 : 경영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증여를 통해 소유권·경영권 이전
 - (가칭)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 대상자 평가·선발,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운영(6월)
 - 가업승계 교육과정을 개설, 경영, 기술, 법무, IT 등 교육
 - 법률·재정 컨설팅 지원, 상속세·증여세 등 세제혜택 확대 추진



(2) 교육·경영컨설팅 체계 정비

- ◇ 농어업 선진화를 이끄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예인력 육성
 - 경쟁원칙 강화, 전문 실습교육 확대, 교육기반 지속 확충
- ◇ 컨설팅은 농어가 중심에서 조직·법인 경영컨설팅으로 개편

□ 농어업교육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농정목표와 부합하는 교육수행 기능 강화

- 교육기본계획(3년 주기)을 수립하고 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 교육과정 개설에 공모를 통한 경쟁원리 도입(공모비율 : '09년 15% → '10년 30%) 및 교육비 자부담을 30% 이상으로 확대
- 교육과정 개발·인증·평가 등 교육지원 S/W 강화

□ 미래세대 정예인력 양성 강화

- 한국농수산대학은 수산·임업·식품분야 등 농식품 전분야 정예인력 양성의 세계적 요람으로 육성(어업과 개설)
 - 가업승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 농대생 대상 후계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농고생 대상 현장 훈련, 진학우대(한농대 진학비율 확대 : '09년 20% → '10년 22%)

□ 현장 수요에 맞춰 컨설팅 사업을 규모별로 운영하되, 개별 농어가 사업량은 축소하고 조직·법인단위 사업 비중 확대

- 농가단위 사업비중을 60% 이하로 축소하고 조직단위 사업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대규모 조직 50개소 수준)
 - * '11년부터는 조직경영체 컨설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 농어가 컨설팅은 비용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하고, 조직·법인 컨설팅은 기업화 촉진 경영·전략 분야 특화
- 사업점검·평가 기관을 별도 지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

다 귀농·귀어대책 본격 추진

◇ 귀농·귀어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등 귀농귀어 대책 본격 추진

- 귀농·귀어 준비부터 정착까지 관련 정보·교육 등의 일괄 제공을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농협·수협)** 연중 운영
 - 귀농·귀어종합센터(농협, 수협)에서 이주희망자의 수요에 따라 유형별·지역별 맞춤형 정보 제공, 상담 실시
 - * 귀농귀촌 정보시스템(www.returnfarm.com) 구축, 상담센터 운영(1577-9597)
- 귀농·귀어 희망자에게 다가가는 **생활공감 정책** 추진(3월)
 -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농지, 빈집, 지자체 귀농시책 등 정보를 종합 제공(KBS, 「5천만의 아이디어」 채택)
 - 온라인·전화 등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 확대
- 귀농·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어업 창업교육과정** 운영(3월)
 - 생산기술부터 경영까지 실습 중심형 합숙과정(3~4개월) 운영
 - * 천안연암대(원예, 가공 등), 여주농전(과수), 농촌진흥청(버섯, 약용작물 등)
 - 전문교육기관을 공모, 3~4주 과정 귀농·귀어교육과정 운영
 - 농어업 인턴제를 활용, 기술 습득 및 일자리 지원(300명)
- 귀농·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영농·영어자금 등 지원**
 - 농지구입, 시설설치, 주택신축 등을 위한 **융자 지원**(1,000억)
 - * 후계농어업인과 동일 조건(1천만원~2억원,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여 수리 시 수리비 보조(1,500호)

라 농지·산지관리 합리화

◇ 여건변화에 맞게 농림업 구조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농지·산지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매입비축 등 새로운 제도 도입

(1) 농지 이용 효율화

□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농지 이용 효율화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
 - 읍·면의 집단화 규모 2ha미만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6월까지) 후 지정
 -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거래를 자유화하고,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허용
 -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임대차 제한 폐지, 전용 제한 완화('09.11.28 농지법 개정)
-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안정적 은퇴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제도」 도입 준비
 - 고령농 사망시 농지를 전업농에 매도, 전업농 육성 및 영농 규모화
 - '11년 시행을 위해 상품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10년 22억원)
- 농지시장 안정 및 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 시행
 - 이농·은퇴 농가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10년 750억원), 창업농 등에 임대
 - 엄격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가격하락이 큰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 매입
- 농지은행 활성화를 통한 임차인 보호 및 농업경영체 지원
 - 음성적 임대차를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로 전환, 임차인 보호
 - *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시에는 임대기간(5년) 및 연장, 임대료 결정,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의 해지 등이 정형화되어 있어 임차인 보호에 유리
 - 농지은행 보유농지를 활용, 규모화 된 경영체의 농지이용 지원

(2) 산지 제도 합리화

□ 산지규제 합리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

○ 보전산지의 중복규제 완화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 보전산지의 중복규제 폐지 및 진입로 개설 허용

* 상수원보호·문화재보호 등을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 대신 「수도법」·「문화재보호법」 등 개별법상 행위제한만 적용

-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이상인 경우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 장기간 타용도 이용 산지의 한시적 지목변경 허용

-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 지목변경 허용

○ 수도권에 속하는 준보전산지에 시설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적('11.6.30까지) 부과 유예

□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산지이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강국 육성을 뒷받침

○ 계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 기본계획제도 도입

○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지전용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사전에 조사·검토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토석채취지 등 훼손산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

○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제도 신규 도입

- 부실복구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석으로 복구토록 규정

○ 지하채굴 기준, 다수업체 채석단지 운영규정 등 정비

마 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및 농어가 고충해소

(1) 가칭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

◇ 농어업계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신뢰 있는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칭)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지원

○ 상반기에 3-4개 지역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단계적 확대

□ 농어업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표조직 구성

○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농어업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부여

* (사례)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지도' 역할은 '농업인교류센터'에서 담당
- 농업인교류센터 : 세무·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해 상담 및 지도 역할

□ 우선, 상향식 접근방식을 통해 시군단위 시범사업으로 추진

* 고창, 의령, 부여 등 공동사업이 활성화된 시·군부터 우선 추진

○ 사전에 농어업인 단체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청취 후 지역 농어업회의소 설립 계획을 수립(3월)

○ 정부·지자체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컨설팅·교육 지원

○ 조직운영비는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등 재정 독립성 유지
- 희망 지자체와 회의소 설립 추진을 위한 MOU체결 추진

□ 하반기에는 광역·전국단위 회의소 설립 준비 작업 추진

○ 지역회의소 추진 상황 평가, 농어업인단체 의견수렴(10월)

○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법 제정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 등

(2) 농어업인 불만처리 강화

- ◇ 농어업 분야 민원·피해 등의 종합 상담·처리·정책화 시스템 구축
- ◇ 현장 농어업인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농어업인 고충사항 해결

□ 민원처리 총괄 팀 설치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6월)

- 농어업인의 주요 고충 사항인 정책자금 대출, 농기자재 분쟁, 대형유통업체와의 공정거래 분쟁 등의 제도적 처리방안 마련
- 통합 콜 관리시스템(고객상담센터)을 구축, 민원 1차 처리비율 향상

□ 민·관 네트워크와 연계, 농어업인 고충해소방안 마련 추진

- 정책자금 대출 : 농식품부, 농수협, 농신보 등으로 협의회 구성, 대출애로 해소
- 농기자재 분쟁 : 관련기업, 생산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 운영
- 불공정 거래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 후 공정위에 조사의뢰
- 현장 민원 : 농어업인교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 방안 강구

* 농어업인 교류센터 : 농어업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민원, 고충을 발굴·해소하는 소통 창구로서 농업인회관이 설치된 도(8개소)에 설립('09~)

□ 민원·건의 등의 처리결과를 평가, 정책화시스템 구축

4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 어업구조 개편, 어장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조성 강화로 안정적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 제도 및 시스템을 혁신하는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어업 구조조정 시스템의 혁신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적정 어선세력으로 감축하기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법·제도 개선
- 원양어선 신규건조('10년 3척, '16년까지 40척)로 원양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조선산업 육성

* 원양·조선업계 합동 설계연구회 신설(1월), 농수산식품 모태펀드로 선박금융 지원

□ 지역실정에 맞는 어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안어업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위임, 해양환경 변화에 신속적 대응

- 수산업법 등 제도개선 및 연안어업 표준관리규정 제정(9월)
- 그물·어구어법 등에 관한 지역별·업종별 어업분쟁은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09.10월 설치)”를 통해 원만히 해결

□ 대규모 외해 양식산업 등 신 성장동력 기반 구축

- 내만 가두리 중심 양식을 고부가 신품종 위주의 외해양식으로 전환
 -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연안에 출현하는 참다랑어를 어획·양식하는 기술 개발 및 제도 마련(6월)

* 내만가두리 양식장 면허면적의 30%(352ha)를 외해로 이설('11년:100ha, '12:125, '13 :127)

- **친환경 갯벌양식어업**을 서해안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개체굴·해삼 등 전략품목 개발(10년 연구용역 실시)
 - 국제포경위원회(IWC)의 변화(보존 → 이용)에 대응, **포경제도 부활**(4월)
 - 생태계 기반 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대규모 바다숲 조성(250ha)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통합적 활용(에너지, 신소재 등) 추진
- **낙후된 수산물 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위생여건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 및 **수산물 브랜드 육성**
-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12월 착공), 위판·공판장 등 산지시설 개선(15개소) 및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추진
 - 산지가공시설 지원(279억원), 수산물 대표 브랜드(12년 30개) 육성
- **수산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편**으로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 지구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 관리기능 전면 개편**
 - 국립수산과학원 구조조정과 연계,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
 -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1월), 법인 출범(9월)
 - 어업지도사무소를 동·서·남해 해역별체제로 개편, 서비스 강화
 -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으로 논 생태양식 창업지원 확대(10년 실시설계)
 - 신규인력 진입을 위해 어촌계 정관 등 제도를 개선하고(8월), 마을어업회사 창업을 통한 어촌관광 진흥 추진
 - * 마을어업회사 : 어촌관광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을 아우르는 지역공동체 회사

5 DDA/FTA 대응

가 DDA 협상 대응

◇ 농어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

* WTO 회원국들은 20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DDA 협상 현황 점검을 위해 1/4분기 중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 예정)

□ 세부원칙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항 중심으로 실익을 확보하도록 노력

○ 관세상한·특별품목·민감품목 등 핵심사항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주요 쟁점별로 G-10(수입국그룹) 및 G-33(개도국그룹)과 협력 강화

○ 수산보조금협상에서는 금지보조금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금지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세부원칙 협상과 병행추진이 예상되는 양자협상에 대비, 주요국에 대한 양자협상 전략 수립

○ 주요국의 관심사항 파악 및 품목별 협상대책 마련

□ 세부원칙 타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이행계획서 작성·검증 등 세부원칙 타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

○ 농어업인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농산물 특별·민감 품목 선정, 수산물 관세감축계획 등 이행계획서 작성준비

* 이행계획서 작성(연내 타결시): 초안(9~12월)→ 의견수렴·보완('11.1~2)→ 최종안('11.3)

○ 이행계획서 검증 및 양자협상 대응계획 마련

나 FTA 협상 대응

◇ 농수산물분야 민감성을 적극 반영하면서 동시에 농어업협력 등 상호 관심사항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

* 호주, 뉴질랜드, 페루, GCC(6개국) 등과 FTA 협상이 본격 진행 중이고 콜롬비아 등 주요 국가와 계속 FTA 확대 예상

-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 농수산물 민감성 반영 노력
 - 특히 쇠고기, 낙농품 등 민감분야에 대하여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등 농수산물 보호 방안 마련에 협상력을 집중
 - 동시에 농수산물 관련 연구·기술·인적 교류 등 협력 확대에도 적극 노력
- 콜롬비아 등 새로운 상대국별 FTA 대응 전략 마련
 - 상대국 교역 관심품목에 대한 보호방안 및 대응논리 마련
 - 현지 시장조사 등을 통한 수출 확대 방안 동시에 적극 모색
 - *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 : 커피, 과실류, 우황 등('08: 4천7백만불)
 - * 한·중·일 등 새로운 FTA 논의 동향에도 대비
- FTA 영향분석 및 대 국민 공감대 확산 노력도 병행
 - 농수산물단체, 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적극 추진
 - FTA 이행시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종합 분석 추진
 - 농수산물 유관기관 해외지사 등 정보수집·분석 네트워크 구축
 - 협상 상대국별 교역통계, 관세 및 유통정보 D/B화

다 한·EU FTA 대책

◇ EU 등과의 FTA에 대비, 품목별 경쟁력제고방안 수립·추진

○ 현장성·시의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

□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 마련, 농가의 불안감 해소

※ (영향분석) 국내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15년차에 2,481(한·미 FTA이행 전제)/3,172억원(비전제) 수준이며, 90%이상이 축산분야

○ (양돈) 질병근절 등을 통한 저지방부위 수출확대, 우수 새끼돼지 공급체계 구축, 품질향상을 위한 돼지고기 등급제 개선 등

○ (낙농) 전국 쿼터제 도입,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우유급식 대상 확대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 마련

○ (양계) 난계대 전염병·뉴캐슬병 근절 및 대형닭(2.5kg 이상) 생산 확대로 생산성 향상, 수출확대를 위한 도계시설 개선 등

○ (한·육우) 농가조직화를 위한 기초·광역 한우사업단 육성, 육우고기 수요창출을 위한 전문판매장 설치 및 홍보강화

○ 품목별 경쟁력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지원

□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 발표전까지 생산자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EU FTA 대책 T/F 논의 및 농어민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3. 안전식품·인정공급

1 친환경 안전 농식품 공급

가 친환경 농어업 기반 확충

(1) 친환경 농업

◇ 지속가능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로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
- 농약 및 화학비료등 고에너지 투입재 감축 등

□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 시군단위의 친환경광역단지(1,000ha이상) 및 마을단위의 친환경 농업지구(10ha) 지정 확대('09: 1,011 개소 → '10: 1,069 → '13: 1,350)
-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 신뢰를 위한 종합유통센터 건립추진
*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09~12) : 경기 광주, 총사업비 480억원

□ 토양·수질 향상을 위한 '흙 살리기' 사업과 맞춤형 비료지원 추진(연중)

-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천적·미생물 지원 등
-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 지원으로 화학비료 사용 감축
* 화학비료 감축계획 : ('09.P) 295kg/ha → (10) 275 → (12) 218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연구활동 및 소비촉진 홍보강화(연중)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2개소(전남대, 강원대)를 설치하여 농법, 농자재,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및 농업교육 기반 마련(12월)
- 소비지 판매장 지원, 사이버 친환경농산물거래소 활성화, TV·라디오 홍보, 학교·공공기관 급식 등 대량수요처 지속 발굴 등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 ('09) 8,400개소 → ('10) 9,200

(2) 친환경 어업

◇ **친환경 어업기반을 확충,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 촉진**

- **자원이용형 어업에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 촉진**
 -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250ha, 150억원), 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고 CO₂ 흡수원·바이오매스로 활용
 - 바다목장 조성사업(여수 등 5개소 완공) 및 총허용어획량(TAC) 모니터링 확대(옵서버 43→70명)
 - 중앙정부 중심의 어업관리에서 지자체 맞춤형 어업관리로 전환
 - 지자체 어업관리 권한 이양을 위한 수산관계법령 개정안 마련(12월)
- **해역별로 어장관리해역(zone)을 설정, 퇴적물 수거 등 어장 정화**
 - 어장환경실태 조사(남해안 '08~'11)를 거쳐 해역별 'ZONE' 지정
 - 남해안의 만(灣)을 중심으로 시범 어장관리해역 지정(6월, 2~3개소)
 - 오염도가 높은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 가두리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 검토(9월)
- **양적 성장 위주의 양식어업을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친환경배합사료 보급(165억원)으로 어장환경 오염 및 수산자원 남획방지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수산물이력제 확대
 - * ('09) 550개소/12품목 → ('10) 600/13 → ('15) 850/15
 -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한 생산해역위생관리기준 고시 제정(12월)
 - 해역등급 설정(60개) : 청정해역, 준청정해역, 관리해역, 금지해역

나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소통강화로 안전·안심정책 구현

□ 위해요소 사전예방 시스템을 확충하고, 철저한 안전성 검사

- 농산물우수관리(GAP) 대상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기존 105개)
- 축산·수산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를 각각 생산비중 70% (현행 60%), 192개 양식장(현행 152개소)으로 확대 운영
- 축산 항생제의 사료첨가 중지('11년, 하반기)를 위하여 법령개정 및 제도정비
 - 사료첨가 항생제 수: ('07) 16종 → ('09) 9 → ('11,하반기) 0
- 농식품 안전성 검사를 확대('09 : 75천건→ '10 : 80)하여 위해 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
 - 농산물 57천건→60, 축산물 10천건→12, 수산물 7천건→8
- 농식품안전지표를 마련(7월), 우리의 식품안전시스템을 진단하고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 도출
 - * 선진식품안전 프로그램 도입여부, 유해물질관리대상 범위, 이행수준 등
-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연중, 35만명)하여 농약·비료 오남용 및 중금속 검출 문제 등 사전 방지

□ 2011년부터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는 고독성 농약 12종 사용 중지

- 고독성 농약 3종 사용중지('10년), 11년까지 전면 사용중지
 - 고독성 농약수(농가용) : ('09) 12 → ('09) 9 → ('11. 하반기) 0
- * 고독성 농약 15종중 산림·검역용 3종 제외

□ 축산물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감시 체계 재정립

-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사전 예방체계 확립(연중)
- 내장·뼈 등 부산물의 위생관리, 성수기·하절기 등 시기별 취약 분야 선제적 기획 감시 추진

□ 소비자 이해와 신뢰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홍보 추진

- 주부와 학생대상 알기쉬운 식품안전 교육자료 발간 (9월, 학교교재로 이용되는 인정도서 추진)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실시(100회)
- 농식품안전상담센터(1577-1203),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foodsafety.go.kr)를 지속 운영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고 쌍방향 소통 강화
- 유사한 인증제 통합을 추진하여 소비자 인식도를 제고
 - *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 통합 등 추진

□ 축산물, 수산물 등 품목별로 분리된 농식품부 산하 검역·검사 관련 3개기관 통합 추진

- 공통인력·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
 - 통합기관내 검사검역기능과 분리된 독립적 위험평가기관을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 위험평가 기반 마련
 - 대상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검사원, 국립식물검역원
 - * 위험평가: 식품의 위해 가능성과 심각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과학적인 절차

다 수입농수산물 관리 강화

- 쇠고기 수입에서 판매까지의 거래내역을 전산관리하기 위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도입(12월)
 - 거래단계별 유통정보 실시간 관리로 사고 발생시 긴급회수
 - * 이력관리시스템 개발('09.12), 시범운영·홍보('10.1~11), 본격 시행('10.12)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2월)
 - *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 부착 및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전산등록 의무화 등
- 쌀·김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 현행 100㎡ 이상 음식점에서 표시
-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위생 관리 강화
 - 안전성 부적합 빈발 품목을(8개국 19개 품목)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연중)
 - 부적합 빈발 품목 : 가리비, 농어, 멍장어, 다슬기 등
 - 수산물 위생약정체결 확대 및 등록공장 현지 위생점검 강화(연중)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 러시아, 대만 등으로 확대
 - * 등록공장 : 2,925개소(중국 1,858, 베트남 442, 인니 387, 태국 238)
- 검역관 교육, 검역기술개발 등 수입위험평가 역량 강화
 - 축·수산물 검역 전문성 보강을 위한 검역관 교육 실시 및 위험평가 국제전문가 초청세미나 실시 등(연중)
 - 식물검역기술개발 5개년('10~'15) 계획 수립 및 추진(1월)
 - * 외래병해충 조기에찰을 위한 기술·장비개발 등 20개 세부과제

라 가축·수산 질병 최소화

◇ 가축·수산 질병 국내유입 방지 및 사전 방역관리체계 구축

- 능동적 사전예찰 중심의 AI 및 신종인플루엔자 방역체계 운영
 - AI 재발 위험이 높은 22개 시·군에 대한 **임상예찰(매주)** 및 유입가능 경로별(철새, 오리, 닭 등) AI **예찰검사** 지속 추진
 -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국산 돼지(고기), 가금(육) 검역 및 국내 양돈·가금류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지속 실시
 - * 전문 검사시설 6개소 설치(6월), 진단키트(7월) 및 예방백신(12월) 개발
-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맞춤형 방역** 추진
 - **구제역**은 국내 유입 가능성 높은 **3~5월에 집중 방역·검역**
 - * 수입건초 소독 및 정밀검사, 농장·종돈장·도축장 일제소독(매주) 및 혈청검사 등
 - '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질병검사 확대(2회 → 3회/년)
 - **결핵병** 모니터링검사 확대 및 사슴 살처분보상금 조정(100 → 60%)
 - * 한육우 : ('09) 300천두 → ('10) 600, 사슴 : ('09) 경기도/2천두 → ('10) 전국/5
 - **BSE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위한 평가보고서 제출·대응(1월~)
 - * '09.12월 현재 BSE 예찰 기준(300천점) 초과, 동물성단백질 사료금지조치 완료
- 수산동물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 수산동물질병 **종합관리대책**('10~'14년) 수립·시행(10월~)
 - 신고체계 구축, 정보수집 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넙치 등 방류 수산동물 질병 **검사어종 확대**(44종 → 55종)
 - 넙치용 질병예방백신(비브리오패균, 노다바이러스) 특허출원(12월)

2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

가 중장기 쌀 수급안정방안 마련

◇ 구조적 잉여 물량 해소를 통한 수급안정 및 유통선진화 추진

- * 쌀 생산 여건 고려시 평년작의 경우에도 매년 평균 20만톤, 09년산(대풍작)의 경우 40만톤 잉여물량 발생
- * 관세화 유예('14년)로 의무수입 증가('09. 31만톤 → '14. 41), 재고부담 가중

□ 논에 콩, 조사료 등 다양한 작물의 재배 확대

○ 밭벼 재배지, 중산간지 등 쌀 생산성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쌀 이외 작물(콩 등)재배를 위한 **논농업 다양화 방안 마련(6월)**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다양화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
- 농가의 참여 유도 및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수매제도, 수입량 조정 등 개선 검토**

○ **간척지를 활용한 조사료 작물 재배 확대 추진**

□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

○ 농민단체 주관 토론회 등으로 농업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11년 관세화시 '15년 관세화 대비 수입물량 8만톤 감축(41만톤 → 33만톤)

□ 아침밥 먹기 등 쌀 소비촉진 및 쌀가공식품 활성화 추진

- 아침밥 먹기 운동(초등학교 아침 간편식 공급, 주부 대상 아침밥 먹기 강좌 등) 전개 및 쌀의 우수성 홍보(국제 세미나 개최)
- 「쌀가루 10% 프로젝트」 추진으로 밀가루 사용량의 10%(20만톤)를 쌀로 대체('08 : 가공용 소비 27만톤 → '12 : 47)
 - 공공부문(군대, 학교 등)부터 지속적인 쌀 가공식품 수요 창출
 - * 건빵(군 급식용) : ('09) 쌀 13% 함유 → ('10) 쌀 30% → ('11) 쌀 100%
 - 가공용 정부쌀 할인 공급 등 안정적 원료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가공 업체에 대한 시설자금('09, 100억원→ '10, 400) 및 R&D 등 지원확대

□ 가격 형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이버 거래 및 선물거래 도입

- 지역농협과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도정업체간 벼 사이버거래 시스템 구축(4월), 선물거래 도입 기반을 마련
- 범부처 상품거래소 설립과 연계한 쌀 선물거래 도입 준비
 - 상장품목, 거래 조건 결정 등 연구용역(3~12월) 및 의견 수렴 등

□ 소비자유통업체에 대한 대응력 확보, 물류 규모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대형 쌀 유통회사의 설립 추진

- 설립 준비단을 구성(3월)하여 사업 방향, 재원 확보 방안 등 검토
- 농업인, 지역농협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설립 본격화(하반기)
- 미곡종합처리장(RPC) 신규진입·퇴출 제도화, 광역(2개 시군이상) 단위 통합 등 경쟁력 강화 병행

나 밀/밀가루 공급·유통 개선

◇ 밀/밀가루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 밀 재배 확대, 해외 밀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 제분업계 경쟁력 강화 유도

□ 국산 밀 생산 확대를 통해 밀 자급률 향상 추진

○ 최근 국산 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재배 면적 증가 추세

* ('08) 2.5천ha(자급률0.4%) → ('09) 5.1(0.9%) → ('10P) 8.6(1.5%)

○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 생산 확대 유도('17년 자급률 10% 목표)

- 자율적 수급 조절을 담당할 국산 밀 대표조직 육성(9월)

- 제분업체·식품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국산 밀 수요 확대

□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의 안정적 해외 조달 방안 마련 검토

○ 곡물 메이저를 통한 수입 위주에서 자체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 수입선 다변화 모색

* 현지상황, 국내 도입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진출 국가 검토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개정하여 유통공사의 해외곡물자원 확보 기능 강화

□ 제분업체의 쌀 가공산업 참여 확대 및 밀가루 가격 합리화 노력 유도

○ 가공용 정부쌀 공급체계 개편(정부 “쌀” → 제분업체 “쌀가루” → 식품업체) 방안 마련

* (쌀+밀)가루 유통을 통한 쌀국수(설렁탕 사리, 자장면 등) 시장확대 도모

○ 국내 밀가루 가격과 국제 밀 가격의 연계성 강화

* 연동되지 않는 경우 밀가루 직수입, 제분업계 신규 진입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다 식량자급률 제고

◇ 중장기 농정지표로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목표치와 연계한 자급률 향상대책 마련 추진

□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07년에 설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

○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목표치 상향,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

* '15년 식량자급률(주식용) 목표치는 54%로 현재 수준(67.4% : '09 추정치)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상황

- 사료용은 사료용 곡물과 조사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설정

○ 국내·외의 안정적 식량 확보 가능성, 국민의 식품접근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완 지표 개발('11년) 추진

-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3월~), 토론회 등 의견수렴(~12월)

□ 자급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및 국산에 대한 수요
확대 등 자급률 제고방안** 마련(6월)

○ **논농업 다양화, 겨울철 재배를 포함한 2모작 생산체계** 구축

- 밀 조숙품종 개발 * 숙기:(현재) 6월 상순 → ('12) 5월 하순

- 논콩, 조사료 등 벼 대체작물 재배기술 및 작부체계 설정

○ 식품·외식업체와의 계약재배 등 **국산 농수산물 수요 확대**

3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가 식품산업 진흥기반 확충과 전략품목 육성

- ◇ 식품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기능성·발효식품 육성, 원산지·품질관리 강화 등 소비자 니즈 충족

□ 세계 식품시장은 약 4조 달러 규모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증가

*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년 자체 식품시장의 40%차지 전망(International Data Group)

○ 주요국은 식품의 가치를 활용, 부(富)와 고용 창출

* 네덜란드 푸드밸리(470억 유로 매출, 60만명 고용), 미국 나파밸리(425억불, 23만명) 등

* 스위스는 국내생산이 없이도 커피(9.3억불), 코코아(9.1) 수출

□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를 R&D 중심의 수출지향형 국가산업 단지로 조성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설립 (6월)하고, 클러스터지원센터·기업지원시설 등의 운영방안 마련

* 전북지역 이전 예정인 농진청·한식연 등과 연구협력체계를 구축

○ 조성 예정지(익산)를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11년)하고, 국내외 식품기업·연구소 등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

* '11년 착공을 목표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11월)

* 식품기업(145개), 식품연구소(10) 등을 유치, 연 4조원 매출, 22천명 고용 목표('15)

□ 전통식품의 산업화 및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 발효기술 연구 강화 등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 촉진

- 세계김치연구소를 발효기술 연구 중심지로 육성(연내 착공, '11년 완공)

* 한식연 부설기관으로 출범(1월), 발효기술 개발전략 수립(12월)

- 고추장·된장 CODEX 채택('09.7)을 계기로 장류식품의 산업화·세계화 추진

○ **술 원산지 표시제 도입(12월) 및 품질인증제 실시(10년 : 탁주, 청주)**

*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09.8)' 후속조치로 추진

○ **천일염 위생수준 향상 및 이력추적제 도입(7월 이후 시범사업)**

* 소금산업 중장기 발전 종합 로드맵 마련(6월)

○ **국내산 농수산물을 소재로 한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 기능성 소재 발굴·평가,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및 DB 구축(14억원)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강화 지원**

○ **식품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대학·식품 기업간 공동 실습프로그램 운영(8개소)**

○ **국내외 식품 생산·유통·소비, 산업전망 등 관련정보를 DB화하여 제공**

* 식품·외식·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식재료 구매실태와 의향 등 조사

○ **수입의존도가 높은 식품 소재·기자재 국산화율 제고 방안 마련(9월)**

* 식자재 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산 소재·기자재 전시 및 소비촉진 유도

□ **농어업과 가공·외식서비스 산업간 연계 강화**

○ **농어가의 소규모 식품가공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 실정에 맞도록 시설기준을 완화(관계부처 협의)**

* 창업 가이드, 경영컨설팅, 위탁가공·판매 및 소규모 시설기준 가이드라인 등 제공

○ **생산자 참여형 농식품기업 육성(60억원) 및 '11년 광역클러스터 사업단 조기선정(10개)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 활용 촉진**

* 클러스터 사업 내실화를 위해 클러스터사업단간 자율협력 체계 구축

○ **식재료 구매·유통실태 조사, 가공시설 확충, 규격 표준화 등 식재료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12월)**

나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한식

- G-20, 한국방문의 해를 한식이 세계로 뻗어가는 기회로 활용
 - G-20 T/F를 구성(1월중), 간소하고 품격있는 한식메뉴 등 준비
 - * G-20 행사 등 유형별 메뉴 및 G-20 추천메뉴 20선 개발, 한식당 '맛지도' 제작·배포, 서비스 교육 등 실시
 - * 회의기간중 해외언론인 대상 한식체험 등 한식문화행사 추진
 - G-20 회의에 이어 'Korea Food Expo 2010'을 개최(11월, 코엑스), 한식 해외홍보의 장으로 활용
- 간소하고 품격있는 식단 개발로 한식을 '세계적인 웰빙음식'으로 정착
 - 반찬수를 유형별로 간소화 한 건강·간소·고품격 메뉴 개발(6월)
 - * 고급 식기, 메뉴판 등 한식당의 고급화 디자인 개발·보급(10월)
 - 대표 한식당부터 우선 활용을 유도하고, 해외 및 일반 한식당으로 확산
 - * 우수 한식당을 선정, 컨설팅 자금 등 지원(5억원)
- 한식 조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
 - 한식전문 조리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식조리 특성화 학교(대학·고교) 지정(3개소)
 - CIA, 르꼬르동블루 등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 한식강좌 개설
 - 재외공관 조리사 지원 및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확대(600~1,000명)
 - * 재외공관에 한식조리 전문가 활용 시범사업 추진
 - 경쟁력 있는 조리사 양성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으로 스타쉐프 육성
 - * 미학·역사·사회학 등 전문교육 병행실시 : ('09) 50 → ('10) 100명

□ **국내 한식업체의 해외진출 본격화에 대비한 지원 강화**

○ 해외진출에 필요한 법령·제도·시장여건 및 진출전략 **정보제공 강화**

- 한식세계화 정책, 현지여건 등의 정보를 종합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

* 현지조사 확대 : ('09년까지) 미국·일본·중국·베트남 → ('10) 호주·유럽

○ 해외진출 외식업체 및 현지 한식당에 창업·경영컨설팅 및 시설
자금을 지원, 성공적 정착 유도

□ **일식·중식 등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지원**

○ 해외 한식당 협의체를 구축, 식재료 공동구매·마케팅 등 구심체로 활용

* '10년은 일본(2), 중국(2), 미국(2)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전개

○ 인테리어 모델 보급, 경영·서비스 교육 등으로 한식당 이미지 개선

○ 우수 한식당 인증제 실시(6월)로 해외 한식당 신뢰 제고

○ 외국인이 한식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물 등 제작·보급

* 한식의 메뉴·유래 등 홍보자료를 만화·소책자 등으로 제작·보급

□ **'한식재단'을 출범(2월),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 추진동력 강화**

○ 재단은 한식 홍보, 해외 한식당 인증, 한식당 경영지원 등 추진

○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준비('09.12~'10.1), 한식세계화추진단
회의 등을 거쳐 발족

다 녹색 식생활 교육 확산

◇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유도 및 음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

- 「식생활교육지원법(‘09.11.28시행)」을 토대로 범국민적 식생활 운동 추진

□ 저탄소형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 농식품부내에 민·관 공동의 ‘국가식생활위원회’를 설치(1월)하고, 향후 5년간의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 식생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녹색식생활지침’ 개발·보급(3월)
 -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 등과 연계, 교육교재로 활용
- 가공식품 푸드마일리지 정보 제공(포털사이트 등) 및 민간 자율표시 유도
 - * 식품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푸드마일리지 알기 캠페인 전개(6월~)

□ 민간주도의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

-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식생활 교육 전개
 - (가정) 아침밥 먹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건전한 식생활 유도
 - (학교) 영양·실과교사들을 통한 교육 강화(교과부 협조)
 - (지역사회) 지역별로 식생활계획, 식생활교육조례 등 제정·활용
- 지자체·교육기관 등을 통해 권역별·대상별 식생활 교육 전개(20회)

□ 전통문화·농어촌 체험 등과 연계, 지역 농식품 소비 촉진

- 농촌체험마을, 농가맛집 등을 식생활 체험공간으로 활용
 - * 1,300여 체험마을 등 대상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및 향토음식 자원화·체험장 육성(15개소)
- 텃밭조성 유기농채소 기르기 등 학교내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6월)
 - * 전통 식생활과 연계한 맞춤형 급식시스템(2종) 등 개발

라 농식품 수출 확대

◇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 수요 창출로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추진

* 수출목표 : ('09p) 48 → ('10p) 64 → ('12p) 100

□ 농식품 수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품목개발 및 시장 다변화 추진

○ 유망품목 수출시장을 다변화를 위한 검역협상 적극 추진

- 파프리카(중국), 삼계탕(미국), 감귤(필리핀), 채소종자(브라질) 등

* 중국의 파프리카 시장 규모 : 약 200만톤(피망포함) / '09 국내 생산량 : 약 3만톤

○ 한식 세계화 등과 연계하여 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

- 해외진출 국내기업·한식당·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 박람회 개최, 식재료 목록 보급, 바이어 상담회 등 개최

* 9,600여 국내 기업이 세계에 진출, 현지 종사자 165만명 고용(kotra)

○ 일·중·러 등 주요 수출국에 해외 물류센터 신규 운영 및 kotra 공동물류센터(20개소) 활용

□ 규모화된 경영으로 수출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출전문단지 육성

○ 원예전문생산단지(168개)의 시설현대화 및 수출활성화 지원

- 시설개선자금 융자(782억원) 및 우수단지 물류비 인센티브(10~15% 추가) 지원

○ 간척지 등을 활용, 생산·유통시설 등이 결집된 첨단 유리 온실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전진기지화

- 정부는 기반 조성에 투자하고, 시설 등은 민간 자본 유치

* '10년 유리온실 시범조성(10ha) : 사업자 선정(3월), 착공(9월), 준공('11.10월)

□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의 고도화 추진

- 가공밥·주류·장류·과자류 등 고부가 상품 수출 지원 확대
 -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수출상품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
 - * (예)매직로즈(온도에 따라 색 변화)는 일반 장미보다 4배 고가로 일본 수출('09 :100만불)
 - 돼지고기 및 열처리 가공제품 신규수출이 가능해진 일본·홍콩 시장 조기진출 지원(시설개선, 마케팅, 바이어초청 등)
-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단지(부산 감천항 일원) 조성('09~'12, 1,372억원)

□ 물류비 지원제도 개선 등 수출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

-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비 총액한도제*** 등 추진(1월)
 - *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물류비를 통합하여 표준물류비의 45%(안) 한도 설정
- 생산농가-수출업체를 계열화한 수출선도조직(20개소) 활성화
 - 품질고급화 및 해외마케팅(박람회·판촉전 참가) 등 지원

□ 해외 소비자·바이어를 대상으로 공세적 마케팅 추진

- **Korea Food Expo 2010**(11월)를 국제행사로 확대, 해외 식품기업·바이어 유치
- **해외 유통·외식업체와 업무약정을 체결, 수출업체 상설 입점** 추진
 - * 업무약정 체결: ('09) 일본 코포삿보로, 중국 RT 등 → ('10) 일본 유니·이즈미, 싱가포르 NUC 등
- **수출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거양**
 - 40여 재외공관과 연계한 한식 홍보행사, 해외 유명 박람회에 kotra와 연계 참여
 - 중소기업청과 협력, Gobiz Korea 사이트에 'Korea Green Products'관 신규 개설

4 해외 농림어업 협력 강화

가 협력을 통한 상생적 자원 개발

- **곡물자원** : 장기적 공급불안에 대비, **진출국가 확대 및 개발방식의 다양화**
 - 농장개발과 함께 **유통거점 확보**(저장·가공·물류시설), 현지기업 지분 참여 등 선진방식 적극 추진
 - * ('09) 5개국 11개 기업 → ('10) 6개국 16개 기업 (20만톤 생산 및 유통)
 - 민관합동의 국가별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 현지진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 투자·유치국이 win-win할 수 있도록 국제동향과 조화된 국내 규범 마련 및 진출국가와의 협력 강화
 - * 투자의 투명성, 식량안보 확보, 관련 법과 제도 준수 등

- **수산자원** : **해외 수산자원 확보 기반 구축**
 - 참치자원 보유국(태평양 도서 8개국)과 협의체(KOPNA) 구성
 - 제1차 수산 고위급회의 → 공동협력과제(선원학교, 가공공장 등) 개발
 - 연해주 어선 조선소, 수산물 유통시설 참여 등 한·러간 교류 확대
 - **해조류 펄프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우뭇가사리 시범양식(130ha) 실시 및 **CDM(청정개발체제) 등록 신청**

- **산림자원** : **해외조림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 조기 확보**
 - '09년 정상외교로 확보한 인니, 캄보디아에 40만ha 조림사업 추진
 -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설립으로 기업지원체제 구축
 -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조림 지역 다변화 및 협력 강화

나 해외 농림수산협력 시스템 개편

- 종합적·체계적 해외농림수산협력 추진을 위한 총괄 시스템 구축
 - 분산 추진 중인 협력사업을 통합·조정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민관협의체인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경연, 민간으로 구성
 - 해외농림수산협력사업 추진 담당기구 설립, 효율적 사업관리
 - (1단계) 농촌경제연구원(아시아농업연구센터) 활용('10년)
 - (2단계) 독립된 "글로벌농림수산협력센터"로 확대('12년)
 - 인력·기술, 인프라 등 패키지 방식으로 개도국 지원
 - 교육훈련 위주에서 인력, 기술, 시설, 인프라 지원 등 패키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규모도 확대('09: 28억원 → '10: 42)
 - '10년중 시범사업추진 성과를 평가·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 DR콩고 지원 시범사업 >

 - 일정 : 사전조사('09.11~12) → 계획수립 및 MOU('10.5) → 사업추진('10.6~)
 - 추진단 구성 : 개발계획수립(농경연), 기술훈련·전문가 파견(농진청), 농업인프라(농어촌공사), 산림투자 환경조사(산림청)

◆ 농어업 기술·식량자급 기반 지원 ⇒ 자원개발 및 타 분야 진출 지원
- 수원국·해외진출 기업의 수요를 고려,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 확대
 - * 기술·교육훈련 등 농촌개발경험 전수, 해외농업정보 분석, 진출 기업 기술지원
 -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설치 : ('09) 6개국 → ('10) 10
 - 아시아 지역의 기술협력추진을 위한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이니셔티브(AFACI)' 사업 본격 추진('09.11월 출범, 12개국)
 - 초청훈련, 워크숍, 생산성 제고 시범사업, 권역별 이슈 공동연구 등
- 농업기술·교육지원 등 농업협력을 해외농업개발사업 등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해외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4. 지역경제 활성화

1 농어촌 산업 육성

◇ 지역 핵심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및 농어촌 특성에 맞는 소규모 창업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소득 확충

가 향토지역 산업화 및 도농교류

□ 지역 핵심자원 산업화를 위한 전략적·체계적 투자 유도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 2,356억원, 163개 시·군

○ 산업화를 위한 지역단위 R&D 투자 활성화

- 중앙-시·도-시·군이 역할 분담하는 종합적·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

- 동일 테마(품목)에 대한 시·군간 공동마케팅, 지자체간 연계·협력 등

○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전략적 수요처 발굴 지원

-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6월)로 지자체 공동 홍보·판매 지원

- 지역 생산품의 시장성 등 정보분석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소규모 창업 및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5개년 종합계획수립(10월)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5월)

○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및 경영 지원

- 도·농 여성기업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확대('09 : 31쌍 → '10 : 60)

* 창업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기법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 생산·가공 시설, 포장개발, 유통개선 등을 위한 지원 확대

* 지원계획 : ('09) 17개소, 17억원 → ('10) 18, 18

□ 농어촌형 제조업 경영환경 개선 지원

- 농어촌 기업 애로 및 규제사항 등 상시 발굴체계 구축, 가공·마케팅·기술개발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10월)
-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리모델링 등 인프라 보강(52개소)
 - * 지역 식품산업, 지역핵심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단지화 유도

□ 농어촌 체험·휴양 시설 확충 및 품질 향상

- 체험마을, 테마공원 등 농어촌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 체험마을 77개소, 테마공원 14개소 등 신규 조성
- 체험마을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품질 향상 유도(12월)

□ 도농교류 생활화를 위한 도시형 도농교류 저변 확대

- 시민텃밭, 옥상정원 등 생활 속 도시농업모델을 발굴하고, 도농교류 안테나 숭 운영계획 수립(10월)
- 도시 초·중학생의 농어촌 체험 및 교육 활성화
 - 도시학생이 한학기 이상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지역 학교를 다니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2개소)
 - 체험마을-학교간 결연을 맺고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팜스쿨(farm school)' 시범 운영
- 도농교류를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등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

나 농산어촌 체험관광 글로벌화

- 전통·경관 및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농산어촌 20곳(Rural-20) 선정
 - 농어촌체험마을 10곳, 한국적 경관과 멋을 보유한 마을 10곳
 - * 지방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부대행사(장관급 회의, Fourm 등) 개최지 고려

- 지역특유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이야기 발굴, 관광자원(향토음식, 축제 등)을 연계한 여행코스 개발
 - 주변 자연휴양림, 숲길 등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체험 기회 제공
 - 주요 지역(2개소)은 문화부와 협력 추진
 - 농산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문화 콘텐츠화, 공공시설의 문화 공간화, 지역특산품의 문화상품화 등

- 국내외 관심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외국인을 대상으로 'Rural-20 체험단' 운영
 - G-20 회원국 대사관, 인터넷(웰촌 포탈),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7월)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외국인 체험단 모집
 - G-20 대표단, 취재단 등의 농산어촌 투어 이벤트 개최
 - G-20 회의 참석자가 회의 이후 Rural-20 마을 중 1~2개소를 투어하면서 우리 농산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 기획
 -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7월), 여행사·대중매체·인터넷 활용 홍보

2 지역 공동 경영체 활성화

가 지역 공동 경영체 육성

(1) 마을단위 농업법인 설립·운영

- ◇ 농업비중이 높은 마을단위로 공동 영농·판매 등을 수행하는 지역농업법인을 구성하고, 지역경제의 구심체로 육성
* 법인 설립수 : ('10) 30개 → ('12) 100

- 마을 거주자, 지역농협, 지역 농업법인, 외부법인 등의 출자로 마을단위 농업법인* 구성(우리나라 자연마을은 43천개 추정)

* 마을의 결속력, 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향후 비영리사단, 조합 등도 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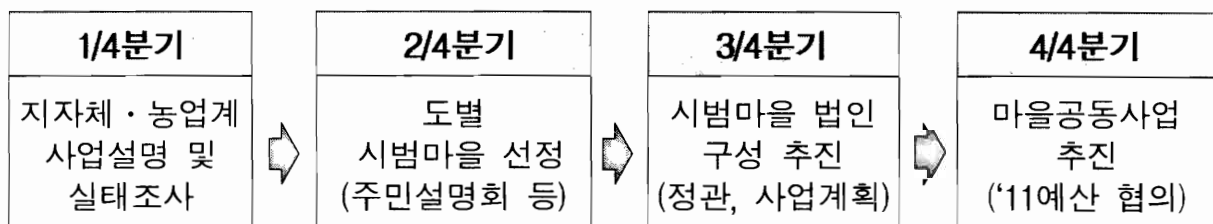
- 발전전략 마련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운영협의회 한시 운영

- 사업 형태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화하고, 관련 정책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해 주업농과 같은 개념으로 육성

- 형태(예시) : 농기계 공유 등 비용절감형 영농, 고령농 영농 수탁, 대규모농지 공동경작, 직불금·교부금 공동활용 등

- 지원(예시) : 교육·컨설팅 지원(마을발전계획, 記帳 등), 공익형 직불제 우대, 시설공동이용사업·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등

- 각 도별 3~5개 마을 추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선정



(2) 자유편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 어업인·어촌공동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유편리어업을 수산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확산

□ 자유편리어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내실화

- 참여 공동체 확대('10: 840개소 → '12: 1,200, 전 어촌계의 60%)로 어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육성
 - 공동체 가입 초기 조업손실 보전 및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육성사업비 지원 확대('10: 237억원 → '12: 1,000)
- 지역별 워크숍(5회), 수산사무소 순회교육 및 해외연수(3회) 등을 통해 지도자 리더십 및 회원 의식개혁 교육 강화
 - 우수공동체 견학을 통해 자원관리 정보교류 및 성공사례 전수
- 가공·유통·관광 등과 연계, 우수공동체는 '마을어업회사'로 육성('12년까지 50개)
 - 성장기반이 마련된 공동체는 지원에서 졸업시켜 자립 유도
 - 지역별 특성을 고려, 시범 성공모델을 선정하고, 민간컨설턴트 제공 및 별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
 - * 전남 무안 "탄도만 낙지공동체" : 4개면 13개 어촌계가 결성하여 낙지자원관리, 불법어업 감시, 어장청소 등 자유편리로 소득 3.3배 증가('03 : 23백만원 → '08 : 76)

□ 자유편리방식을 수산정책 전반에 적용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대상 어종을 확대하고('10: 11개 어종 → '15: 15개) 자유편리를 바탕으로 어황 여건에 탄력 대응
- 어업자·어업자단체간 협약에 의한 자원관리 도입(4월 법 시행)

(3)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

◇ 주민이 주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으로 농어촌 활력 제고

- 농어촌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회사 모델 발굴('10.6)
 - 연구용역 결과('09.12)를 토대로 **농어업형, 도농교류형, 서비스 제공형** 등 농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개발
- 모델 유형별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12월)
 - 공동체회사 보육센터 설립,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등
 -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09.11월 국회 제출)
 - 사회공헌 희망기업, 1사 1촌, 여성농업인-기업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컨설팅 등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병행 실시
 - '12년까지 50개소 육성 목표, '10년에 2개소 시범사업 추진

< 사례 >

(농식품형) 전통식품 제조, 농가 레스토랑, 로컬푸드 등 농식품 가공·유통,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작업 대행 등 농어업을 매개로 하는 사업

- * **고삼농협 생명농업지원센터** : 지역 주민 34명을 고용하여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작업 대행, 학교급식 농산물 배송 등 사업 운영(월80~50만원/1인)

(도농교류형) 체험마을, 마을단위 휴양법인, 농어촌 유학센터, 문화공방 등 농어촌 자원 발굴 및 도농교류 확대

- * **양양 철딱서니학교** : 농어촌 유학사업으로 소득 증대(유학비 월 70만원, '09년 현재 23명 유학 중). [5명 일자리 창출, 월 14백만원 수입]

(서비스제공형) 돌봄 서비스, 반찬배달, 버스 운행 등 서비스 제공

- * **거창 돌봄지원센터** : 방문목욕, 요양서비스 등 복지부 바우처사업을 위탁운영하면서 독거노인 등에 대한 반찬서비스 제공(32명 고용)

3 농어촌 복지·생활여건 개선

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 강화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10~'14)'추진 및 2대 선진제도 도입

- 범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10~14) 추진
 - 2대 선진제도* 도입 및 7대 부문별 주요과제** 추진
 -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
 - ** 보건·복지, 교육, 생활 인프라, 경제활동, 문화·여가, 환경·경관, 지역역량

-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 영위와 관련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운용
 -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응급 등 8개 분야의 ① 주민 수요가 많고, ② 측정 가능하며, ③ 정책목적으로 적합한 31개 항목 선정
 - 재정여건과 시급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5년 동안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 매 5년마다 항목 및 목표 보완
 -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관련 사업 추진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주기적 실태조사(항목별 1~2년 주기)로 서비스 수준 점검, 권고사항 제시
 - * 실태조사는 '11년부터 매년 실시하되 심층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격년제로 실시
 - 실태조사방법, 추진체계, 평가방안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6월)
 - * '14년까지 서비스기준 달성여부 평가를 위한 사회통계기반 구축

- 정부정책 입안단계부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차별적인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는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
 - 가이드라인 마련(6월), 시범적용 및 보완(12월)

나 농어촌 복지지원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강화

◇ 농어업인·농어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내실화 등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

○ 농어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확대

* 연금보험료 최대 지원액(연간) : ('09)394천원/인 → ('10)426천원/인

○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추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09.4.20)

□ 고령·영세농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활성화

○ 질병·사고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70세까지→75)

* ('09) 13천 가구 / 47억원 → ('10) 15천 가구 / 55억원

○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을 경로당, 다문화가족 등으로 확대

*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가사도우미 지원 시범추진(1월)

○ 농어업인 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지원 방안 마련

- 농어업인 질환 전문센터지정 및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 연구용역(3월), 지원방안 마련(10월)

○ 이민 여성농업인 대상 단계적 영농교육 확대

- (1단계) 기초 농업교육 500명, (2단계) 1:1 작목별 맞춤교육 500명

* 농어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장기 지원 : '20년까지 인력 육성 10천명

□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강화로 육아·교육 부담 경감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09) 가구당 농외소득 3,500만원 미만 → ('10) 3,700

○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

*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규모 : ('09) 475억원 → ('10) 505억원

□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고

○ 농어촌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및 복지지원을 위해 여성
농업인센터 시설 보완 지원(15개소, 10억원)

* 보육시설평가인증에 적합하도록 시설 개선

○ 여성협업농(부부농업인중 여성)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검토

* 농식품부-보건복지부 협력 연구용역(3월), 지원방안 마련(12월)

□ 겨울철(10월~2월) 농산촌 저소득층에 난방연료(땔감) 무상 제공 및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 15천 세대에 가구당 5m³의 땔감 제공

* ('09 겨울) 55,000m³/11천 세대 → ('10 겨울) 75,000m³/15천 세대

○ 농어촌 뉴타운, 산촌생태마을 등에 목재펠릿보일러 4천대 보급

* 펠릿보일러 보급 : ('09) 3천대 → ('10) 4 → ('12까지) 39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

○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무상 우유급식 확대(09: 374천명 → 10: 454)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생(58천명) 무상급식 신규 실시

*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 ('09) 374천명, 216억원 → ('10) 512, 296

다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

◇ 농어촌의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지역개발 주체 육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

□ 지역주도의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정비

- 포괄보조금 제도도입으로 지역주도의 자율적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 * '1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9,736억원(120개 시·군) 지원
 - 주거·교통 등 분야별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 컨설팅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정주체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마을) 상하수도, 주택개량 등 기본생활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 발전모델로 활용할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주민과 이주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마을 재정비 추진
 - * 전원마을조성사업 61개소(계속 44, 신규 17)
- (소생활권) 영농·생활권 단위로 권역화(3~5개)하여 소득기반, 생활환경, 경관 등을 종합정비, 상향식 지역개발 모델로 발전
 -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41개소(계속 177, 신규 64)
- (소도읍·거점면) 생활편의 기초서비스 제공 거점지역 개발
 - * 소도읍육성 36개소(계속 28, 신규 8), 거점면종합개발 24개소(계속 8, 신규 16)
- (중소도시) 거점지역과 배후마을을 연계하여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제공방식 다양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비

□ 혁신적 농어촌개발 모델 도입·적용 추진

- 젊은 귀농인력 및 농어업인 등의 정착유도를 위해 쾌적한 주거 환경 및 편의시설을 갖춘 **농어촌 뉴타운** 조성 추진
 - 기숙형 공립고, 복지·문화·친교 프로그램 및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
 - * '09~'11년 시범사업(5개소, 700세대) 추진 후 농어촌지역개발 주요모델로 발전

□ 농어촌 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 농어촌주민이 주택을 보다 쉽게 신·개축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한도 상향조정 및 지원물량 확대
 - * 세대당 융자한도/지원물량 : ('09) 40백만원/7천동 → ('10) 50/8
- 농어촌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노후주택 고쳐주기** 활성화
 - 자원봉사자·봉사단체 등과 연계, 농어촌 소외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 * 지원계획 : ('09) 113가구 → ('10) 130
- 고령 노인 등을 위한 집단거주 주택인 **공동체형 농어업인 홈*** 조성
 - * 연구용역('10), 시범사업 추진('11)

□ 다양한 유형의 지역개발 주체 육성으로 활력 증진

- 마을리더, 공무원, 컨설팅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 교육이수자 풀을 구축, 마을사무장 채용 등에 활용
 - * 사무장 채용 계획 : ('09) 465명 → ('10) 605 → ('14) 1,000
- 도시 우수 인력을 농어촌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
 -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연계,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 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 시스템 구축

4 농림어업 생산기반 확충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

◇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영농 기반 확충 및 새만금을 비롯한 간척지의 미래지향적 개발 추진

- 안전영농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농업용수는 **지역용수(농업·생활·환경용수 등)** 개념의 개발·관리로 전환
 - 재해취약 저수지 양배수장 보수·보강 집중 지원(410지구)
 - 상습침수 농경지 120지구 30천ha 배수개선(23지구 4천ha 준공)
 - * 예산 편성방식개선(지자체 자율편성 → 중앙), 재해우려지역 집중 투자
 - 용수개발은 생활·환경용수 등의 다목적 수요를 반영
 - * 저수지 등 67개소 공사 시행
- 새만금을 수출형 **복합농업단지**로 개발
 - 관계부처 합동,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 수립(1월)
 - 농업, 관광,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도시 등 종합개발
 - 방조제공사 완공(4월) 및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 착공(7월)
 - * 방수제 신규 착공 9개 공구 54Km
 - 다기능부지(200ha)를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착수(12월)
- 간척지는 지구단위(**zoning**) 개념을 도입하여 첨단유리온실, 축산·원예, 가공·유통시설단지 등 **미래형 농업단지**로 개발
 - 준공후 미처분 간척지(11천ha)를 우선 활용, 사업시행중인 지구는 기본구상에 맞는 기반시설 확보 추진
 - 「**미래형 농업단지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 및 법률**」 제정 추진
 - * 단지 지정기준 및 절차, 입주업체 지원, 간척지 임대분양 원칙 등

나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 사업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자원 확보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

○ '12년까지 저수지 둑 높이기 96개소 및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추진

□ 물부족 시대에 대비,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둑을 높여 2.4억m³의 추가용수 확보

○ 농어촌의 다양한 용수수요에 활용하고, 비영농기에 하천으로 흘러보내 수생태계 보존 및 수질개선에 기여

* '09년도 20개소 착공, '10년도에 60개소 착공 → 2012년 완공

· 섬진강유역내 9개소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 7개소는 '11년 착공

○ 설계시 지역 의견 및 특성을 반영, 저수지 수변(水邊)을 명소로 개발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 방안 마련

□ 영산강 수질개선과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영산호·영암호 배수갑문 및 연락수로 확장 추진

○ 영산호바닥 오염 퇴적물 배출을 위한 「저층수 배제시설」 설치

○ 어도 등 생태복원 시설과 전망대 등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을 설치하여 휴식·조망·관광 등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

* '10. 4월에 착공하여 용지매수·배수갑문 가물막이 공사 시행

□ 4대강 상류 산림의 토석유출 예방과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위해 사방사업, 숲가꾸기, 조림 등 실시

○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상반기) 후 착수, 연말까지 완료

* 주요 사방사업 : 사방댐 280개소, 계류보전사업 30km

다 어촌·어항 종합개발

◇ 어촌정주환경, 어촌관광기반 조성 및 어항시설 확충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소득증대 도모

□ 어촌·어항관광개발, 어촌종합개발 등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 '10년에 신규사업 5개소, 계속사업 23개소에 209억원 지원
-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항개발사업 60%이상 조기 발주(1분기)

□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된 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활성화

- I 단계사업(112개소)을 조기 완료하고, II 단계사업 추진여부 결정(7월)
- 마을별 운영상태를 구분하고 미흡마을(20여개소)은 정비(10월)
 - *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조사 및 진단 연구용역 추진(2~7월)

□ 생산·유통·가공·관광기능을 겸비한 복합기능 어항 개발

- '08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한 6개항의 방파제·물양장·부지조성 등 어항개발계획 수립
- 기존어항의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확장 및 친수·조경시설 등 어항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 국가어항 34개항 1,420억원, 지방어항 44개항 541억원 투자

□ 안정적인 해외 수산자원 확보 및 수산물 수출기지 건설을 위한 해외 어항개발 추진

- 남태평양 참치어장 인근 솔로몬제도 어항개발 타당성 조사(3~10월)

라 산림기반 확충

◇ 임도, 사방댐, 백두대간 활용기반 조성 등 산림 SOC 사업 확대 및 주요지역 산림복원 추진

- 산림 보호와 경영, 바이오매스 생산의 기반시설인 **임도 확충**
 -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및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작업도** 설치
 - * 간선임도 및 작업도 : 580km, 716억원
 -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
 - * 임도 구조개량 사업 : 442km, 249억원

-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수해 최소화
 - 산사태 피해 예방, 수원함양 및 산지 안정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 사방댐 : 695개소, 1,321억원 / 계류보전사업 : 61km, 82억원
 - 산불진화 헬기 취수원, 가뭄시 농업·생활용수로 활용 가능한 **‘물가두기 사방댐’** 신규 조성(10개소 70억원)
 - 산불진화용 헬기 취수원이 없는 중요 보호 산림지역에 시설

- **백두대간·DMZ 일원** 활용기반 조성 및 주요지역 **산림 복원** 추진
 -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테라피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토지보상·기본계획·설계 등 본격 추진
 - DMZ 자생식물원 조성 및 **DMZ 평화의 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 한국전쟁 참전국(16개국)을 상징하는 ‘세계평화산림휴양단지’ 구상
 - 훼손된 백두대간보호지역(9ha)·민통선이북지역(41ha)·전통사찰(7개소) 주변 산림복원 및 독도 복원사업 설계 추진

5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가 금융지원 시스템 개편

◇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금융관리 기능강화, 보조금 개편 등을 통하여 금융지원의 효율성 제고

- 정책자금 시중은행 전면 개방 등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농·수협에서 시중은행까지 확대, 경쟁체제 도입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유도
 -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취급을 희망하는 은행을 선정, 약정 체결(연중)
 - 신용도·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신용대출 추진('10 : 1,000억원)
-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탈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능강화 방안 마련 검토
 - 리스크가 큰 사업 및 대규모 사업 자금 지원, 신용보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 전문화된 농식품 산업 금융 추진
 - 농수산물기금의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관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
-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합의된 보조금 개편 추진
 - 보조금 개편원칙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반영여부 지속 점검
 - 경제성(B/C, IRR 등) 평가를 통해 사업 존속여부 판단
 - 사업 통폐합을 통한 집행체계 효율성 제고('10: 184 → '12: 100개)
 - 품목단체 육성과 연계, 보조금 지원시 품목단체 추천 등 역할 강화

나 투자기반 확충

- ◇ 농식품 분야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 활성화
 - 시장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조성

- 그동안 농어업 분야 투·융자는 정부재정에 크게 의존
 - * 현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민간투자는 전무
 - 정부 중심의 재원배분에 따라 투자 효과성 저하, 민간투자 위축 등 비효율적 배분 초래
- 농식품 분야의 투자대상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우수 기업 발굴 및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농수산식품 기업 DB 구축
 - 전략적 투자 유치(IR) 활동 등과 연계, 유망기업 집중 홍보
 -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핵심사업을 선정, 집중 관리
 - * 국가식품클러스터,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군 유통회사, 첨단유리온실 등 중점 유치
-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10년 예산안 : 600억원), 시장자본 유입을 촉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 한우·양돈산업, 천일염, 전복 등을 투자대상으로 우선 검토
 - '10년 하반기 모태펀드 운용개시를 목표로 상반기내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 제정 추진
- 외국인 투자 유인 발굴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외자유치 전담반」 운영(1/4분기)
 - 지자체, KOTRA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외자유치 활동 추진
 - 글로벌 식품기업 및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10년 3회)

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 ◇ 성장률·고용유발효과가 큰 식품분야 창업 지원 강화
 - 식품기업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 ◇ '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신규 일자리 29,000여개 창출
 - 인턴·R&D 기술인력,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 생산유통

□ '09년 하반기부터 농림어업 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은 정체되고 있어,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

○ 농림어업 GDP : ('08, 3/4분기) 77,820억원 → ('09, 3/4) 80,260(3.1%증)

○ 농림어업 취업자 : ('08, 3/4분기) 1,843천명 → ('09, 3/4) 1,799(1.4%감)

□ 농림수산식품 분야 일자리는 국가 전체의 약 16.9%, 특히 식품 분야는 높은 성장률과 고용유발효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큼

○ 식품분야 성장률 : '99~'07년 평균 6%(경제성장률 5.6%)

○ 식품분야 고용유발계수 : 12.1명/10억원(전체산업 10.6)

* 고용유발계수 : 어느 생산부문에서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 + 생산과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 식품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지원** 체계화

○ 농수산물유통공사, 창업컨설팅전문가 등과 품질향상·비용절감 프로그램 마련 등 창업지원 체계화로 창업 성공률 제고

○ G20, 한국방문의 해,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해 일자리 확대

* 2002년 월드컵 특수로 외식분야 일자리 전년대비 25만명 증가

□ **농어업 생산분야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창업지원 확대**

- 기업승계 영농·영어 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교육, 컨설팅, 생산기반 지원
- 우리술, 장류, 천일염, 기능성식품 등 「1+2+3차 복합산업」 창업 지원

□ **'10년도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신규 일자리 29,000여개 창출**

- (직접일자리·공공) 청년 실업난 해소, 저소득층 공공근로, R&D 기술개발 분야 9,646개
-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숲가꾸기 등 녹색산업기반 조성,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분야 16,646개
- (생산/유통기반) 원예 등 생산기반 및 시군유통회사 건립 등 중장기 사업 분야 2,711개

□ **농어촌 서비스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일자리 확대**

- 정보화, 마케팅, 관광 등 다양한 직종 경험자의 귀촌을 지원해 다양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의 운영 인력 공급
- 농촌형 공동체 회사, 마을법인 등 신규 인력 수요처 개발

□ **농림수산식품분야 일자리 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강화**

- 유관기관, 유망 농식품기업, 농업법인, 지자체와 연계하여 등록정보를 갱신하고, 홍보를 확대(www.agrojob.kr)

IV. 과제별 주요일정

[1] 경영혁신 · 소득증대

1. 농어업 경영혁신 · 비용절감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 비용절감 경영혁신 운동 전개	연중
1분기	· 비용절감 효율성 분석	3월
	· 비용절감 운동본부 설립	3월
3분기	· 비용절감 사례집 발간	9월
4분기	· 비용절감 추진 관련 평가 및 환류	12월

2.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절감

연중	· 청사 노후조명 고효율 LED로 교체	연중
	· 하이브리드차량 등 고효율 차량 도입	연중
	· 점심시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상시화	연중
	· 산하·관련 기관별 에너지 지킴이 운영	연중
	·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및 제조시설 확충	연중
1분기	·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대상자 선정	1월
	· 시설원에 목재펠릿 난방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1월
	· 지열난방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3월
3분기	· 농어업용 에너지 사용 합리화 심포지엄 개최	9월
4분기	·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10월
	·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매뉴얼 작성·배포	11월
	· '11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공고	12월
	· 목재펠릿 품질 인증제 도입	12월

3. 농어가 소득 · 경영 안정

연중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상연습 실시	연중
	· 어업 경영체 등록 실시	연중
1분기	· 어류 방류사업 추진 기본계획 마련	3월
2분기	· 공익형 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6월
4분기	· 재해공제 상품 개발	10월

4. 농식품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

연중	· 농식품 물가관리(50품목 중점)	연중
1분기	· 농어업 선행관측 도입(6개 품목)	1월
	·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3월
2분기	· 산지유통 관련 사업 자금 통합 방안 마련	6월
4분기	· 우유 직판쿼터제 도입	12월

[2] 체질개선 · 미래준비

1. 녹색 성장 및 농식품 R&D 혁신

1분기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1월
	·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대상지 선정 및 설계	2월~3월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3월
	· R&D 심층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 실시	3월
2분기	· Web 기반형 통합 기술 DB 구축방안 수립	6월
	· 품목별 기술협의회 구성	6월
3분기	· R&D 심층평가 완료 및 범부처 투자전략 기획	9월
4분기	· Web 기반형 통합 기술 DB 구축	12월
	· 민간 R&D 투자 촉진책 이행 방안 마련	12월

2. 종자 · 생명산업 육성

1분기	· 종축산업 활성화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1월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착수	2월
2분기	· 육종전문인력양성 세부계획 마련	4월
3분기	· 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9월
	· 곤충산업육성법 시행	9월
4분기	· 「방사선돌연변이육종센터」 설계 완료	11월

3. 농정추진체계 개편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어 종합센터 운영 · 고객애로 상담센터 설치·운영 	연중 연중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법 개정 · 수협법 개정 	2월 2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승계농 지원센터 구축·운영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수산 대학 어업과 신설 · 가업승계농 대상자 선발 및 지원 	9월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경영지도 사업평가 계획 수립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연금제도 상품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사례 자료집 발간 	12월

4.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어업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다랑어 외해양식장 개발 및 제도 개선 	연중

5. DDA/FTA 대응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 주요 쟁점별 공조 그룹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세부원칙 협상 대응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호주/뉴질랜드, 페루/콜롬비아, GCC FTA 협상 대응 	연중

[3] 안전식품·안정공급

1. 친환경 안전 농식품 공급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연구 및 소비촉진 홍보 · 맞춤형 비료 지원 	연중 연중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브루셀라병·결핵병 방역 보완대책 마련 	1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특별방역대책 추진 	4~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기쉬운 식품안전 교육자료 마련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김치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확대 	12월

2. 쌀 수급 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용쌀 할인 공급 쌀 가공업체 시설자금 확대 지원 	연중 연중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건빵의 쌀 합량 상향 조정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 가공기술 R&D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 준비단 구성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부 대상 아침밥 먹기 강좌 개최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농업 다양화 방안 마련 	6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 가공기술 연구개발 D/B 구축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급률 목표치 이행결과 점검사항 및 목표치 조정사항에 대한 공청회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별 자급률 향상대책 마련 	12월

3.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 공동 '국가식생활위원회 설치'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김치연구소 출범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G20 대비 한식 홍보 T/F 구성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식재단 설립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식생활지침' 개발·보급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설립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금산업 중장기 발전 종합 로드맵 마련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유리온실 시범단지 착공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rea Food Expo 2010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G20 정상회의 연계 한식홍보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술 원산지 표시제 도입 	12월

4. 해외 농림어업 협력 강화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협력 시범사업 실시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 연안국 수산양식 기술 전수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국·내외 서명 및 비준 추진 	연중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태평양 도서 8개국 수산고위급 회의 개최 	2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기후변화 수산위크숍 개최 	5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총회 개최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농업개발 사업 평가 	12월

[4] 지역경제 활성화

1. 농어촌산업 육성

연중	· 도-농 여성기업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확대	연중
1분기	· Rural-20 프로젝트 대상 농산어촌 마을 선정	2월
2분기	· 농외소득법 시행령 제정	5월
	·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	6월
	· 팜스쿨(Farm School) 및 농어촌 유학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6월
3분기	·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7월
	· 농외소득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10월

2. 지역 공동 경영체 활성화

연중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및 회원대상 교육	연중
2분기	· 마을단위 농업법인 시범마을 선정	6월
	· 자율관리어업 시범 성공모델 선정	6월
	· 농어촌 공동체회사 모델 개발	6월
3분기	· 마을단위 농업법인 시범마을 구성·운영	9월
4분기	· 체험마을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평가	12월

3. 농어촌 복지·생활여건 개선

연중	·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중
	·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연중
	·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기사영농도우미 지원 농어업인 학자금 융자 등 복지 지원	연중
2분기	· 농어촌 뉴타운 입주자 선정	6월
4분기	· 농어업인 질환 지원방안 마련	10월
	· 여성협업농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12월
	· 공동체형 농어업인 홈 조성 방안 마련	12월

4. 농림어업 생산기반 확충

1분기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수립	1월
	▪ 4대강 연계 저수지 독높이기 10개소 착공	3월
	▪ 어항공사 60% 조기발주	3월
2분기	▪ 새만금 방조제 준공	4월
	▪ 새만금 농업용지 기본설계	6월
3분기	▪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공구별 설계완료	8월
	▪ 새만금 방수제 공사 착공	7월
	▪ 백두대간 고산수목원·테라피단지 설계 추진	7월
4분기	▪ 1호 방조제 추가 공사 마무리	12월
	▪ 임도, 사방사업, 산림복원 등 산림사업 준공 및 평가	12월

5.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

연중	▪ '10년도 재정 조기집행 및 실적 점검	연중
2분기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령 제정	6월
	▪ 보조금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6월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①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		
<p>가. 협동조합 개혁</p> <p>(1) 농협 개혁</p> <p>(2) 수협 개혁</p> <p>(3) 산림조합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구조 개선 농협법 개정(6월) ○ 중앙회 사업구조개선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12월) ○ 완도군 수협 계약 이전(1월) ○ 수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4월) ○ 구조조정 : 경비 20% 감축, 임직원 보수 반납(3~20%), 7개 조직 축소, 8개 부실사업장 폐쇄 ○ 부실조합 신용사업 양도(고흥→순천조합), 부실우려 13개 조합 경영개선 완료(9.1) ○ 중앙회 정원 10% 감축(3.1), 임원임금 10% 반납 및 전직원 임금 동결(1월) ○ 중앙회 정원 5% 감축(12.31) 	<p>완료</p> <p>추진중</p> <p>완료</p>
<p>나. 공공기관 선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공사) 정원 14%감축(△844명), 조직축소(△5부서 15팀), 농지개량 매각(8.26), 노조의 인사·경영 불개입 합의서 체결(6월) ○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원 11%감축(△64명), 조직축소(△본부8, 해외2), 한식세계화 전담부서 신설(70명), 역량강화단 운영(10명 퇴출) ○ (마사회) 정원13%감축(△108명), 조직축소(△2실 5팀 1장외), 경마이익금 사회환원 확대(당기순익의 60 →70%), 나눔경영(복지차량 지원(100대), 직거래장터 운영), 기업은행과 공동중소기업지원펀드 조성(1,000억원) 	<p>추진중</p>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② 농식품 R&D 개편 및 녹색성장 지원		
가. 농수산 과학기술 R&D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시행(10.2)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4.15),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10.2) 설립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10~’14)’ 수립(12.23) 	완료
나. 농수산·식품 지역 연구 기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R&D 활성화방안 마련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에 포함(11.9) 	완료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ASEAN 특별정상회의시 공동성명으로 AFoCO 설립제안·채택(6.2)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확정 (7.6) ○ 목재펠릿 에너지 활용대책 수립 (9.21) ○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수립(10.26) ○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11.5) 	완료
라.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펠릿·화목보일러 6,000대 보급완료 ○ 바이오순환림 1,663ha 조성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방안’ 용역 완료(8.31) 	완료
마.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어선 129척, 연안어선 1,610척 감척 ○ 바다숲 5개 지역 100ha 조성완료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확대(’08: 659개소 → ’09: 750) 	완료

업무 계획	이행 실적	이행상황
3 직불제 개편		
가. 쌀 직불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령」 개정(6월) - 지급대상자 요건설정, 실경작 및 부당 수령자 확인 강화 등 	완료
나. 직불제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제 개편,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 합의(7월, 농어업선진화 위원회)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상연습 실시 계획 마련(10월) ○ 경영이양직불제 개편(1월) - 지급대상 농지 확대, 지급단가 인상 등 ○ 경관보전 직불제 내실화 방안 마련 - 마을경관보전 활동비(30만원/ha) 신설 	완료
4 유통구조 개혁		
가. 시군 유통회사 설립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시군유통회사 법인설립(4.15) ○ 시군유통회사 발전협의회 구성(5.21), 시군유통회사-이마트간 직거래 MOU 체결(11.12) ○ '10년 시군유통회사 설립 추진계획 수립(10.30) 	완료
나. 직거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산지협력사업 추진('09, 545억) ○ 경마공원 직거래장터 운영(4~12월, 63회, 51.3억원 매출) ○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4개소) 개설(5~7월) 	완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⑤ 농식품 수출 확대		
가. 식재료 수출 및 공격적 마케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 수출협회’ 설립(5월) ○ ‘09년 팔미핀(버섯, 홍콩삼계탕, 호주파프리카, 일본(제주산 돈육) 검역협상 타결 ○ 해외박람회 홍보관축전(80회), 재외공관 연계 홍보(35회) 	완료
나. 100억불 수출 핵심프로 그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프리카, 딸기 등 10개 품목 13개 수출 선도조직 육성 ○ 수출유망품목별 41개 우수업체 지원 ※ 43.9억불 수출(12.15기준) (‘09년 53억불 목표 대비 82.8%, 전년 대비 5.8% 증) 	완료
⑥ 해외 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		
가. 해외농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11개 기업 선정 및 자금지원(210억원) ○ 중앙아 아제르바이잔과 농업협력 MOU 체결(10월) ○ 베트남, 브라질 등 6개국과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추진 	<p>완료</p> <p>추진중</p> <p>완료</p>
나. 해외수산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수립(10월) ○ 노후원양어선 대체(1척, 24억원) ○ 해외 수산자원 외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39천톤 확보 - 태평양수역 참치쿼터 등 37천톤 확보 	완료
다. 해외산림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3월) 및 캄보디아(10월)와 각 20만ha의 조림사업 MOU 체결 ○ 파라과이와 양자협력 관계 수립(7.31)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 유치(10.3) 및 준비기획단 발족 	완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⑦ 식품산업 육성		
가.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의 명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김치연구소 입지선정(광주, 7월) ○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8월) ○ 세계김치연구소 추진단 구성(9월) 	완료
나. 한식 세계화 및 식생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세계화 5대 전략 수립(4월) ○ 한식세계화 추진단 출범(5월)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5월)·시행(11월) 	완료
다.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조성(4월)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11월) 	완료
라. 지역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클러스터(신규 12개소) 조성 지원 	완료
마. 쌀 가공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8월) ○ 정부 가공용쌀 가격 인하(1,446원/kg → 950) ○ R&D·시설자금 100억원 지원('09: 60) ○ 쌀 가공 기술 개발 기술수요 조사(10월) ○ 쌀국수 시식회(10월) 및 쌀가공식품 공급 시범사업 실시(11~12월) 등 	완료
⑧ 안전한 식품 공급		
가.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HACCP 확대 ★ 생산비중: 2%,50% → 3%,60% ○ 농산물안전성검사 확대(49→56천건) ○ 국산쇠고기 이력관리제 도입(6월) ○ 소비자단체의 도축장평가(4~11월) 	완료
나. 가축질병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상시방역체제 구축 (연중) ○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수립(1월) 	완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9 농어가 경영안정		
가. 농어업 생산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화학비료 가격상승분('08.6월 63%인상)의 80% 수준 지원 및 유기질 비료, 녹비작물 재배 확대 ○ (유류)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08 : 297만kl→'09.11 : 259), 시설원예농가 에너지 절감시설 및 고효율 난방기 보급(813ha, 2,192농가) ○ (사료)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0~6%),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08~'11),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1조원) 지원 등 	완료
나. 에너지절감 R&D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현장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공기이용 난방시스템 실증(4월, 서귀포) - 연속식 펠릿난방기 설계, 성능시험 - 하이브리드 농산물건조기 현장실증(10월, 음성) - 열손실진단 및 매뉴얼 발간(12월) ○ 신재생에너지(지열, LED 등) 및 바이오 에너지 농업적 활용기술 개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LED 광처리장치 개발 기술이전 : 2개업체(2월) - 하이브리드농산물건조기개발(5톤, 5월) - 비식량 에너지 작물 99점 수집 및 셀룰로스계 바이오에탄올 전처리 공정 개발(미생물 3종 선발) - 브라질농업연구청과의 상호 연구 협력실 설치(12월 상호설치 완료) (국제공동심포지엄개최, 5월) 	완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다. 농기계 은행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농기계 매입완료 및 농작업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중고 농기계 매입 : 15.7천대(3천억원) - 농작업 대행 : 28천ha ○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사업자 지원 근거규정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완료</p>
라. 농가경영회생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외에 농업용시설로 매입대상 확대 및 지침 마련(4월) ○ 임대기간 연장(5→7년) 및 환매가격 개선(6월) ○ 농지매입비축사업 시행방안 마련(12월) 	<p style="text-align: center;">완료</p>
마. 농어업 재해보험 통합 바. 농식품 수급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3.5), 하위법령 제·개정(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대상 및 보장범위 확대 ○ 가격동향 및 물가 모니터링 회의 개최(8회) ○ 수매·비축 농수산물의 탄력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출(천톤) : 고추 5, 양파 12, 콩 183, 참깨 30, 마늘 2, 수산물 5 ○ 원료곡물 등에 할당관세(57품목), 시장접근물량의 탄력적 운용(증량 626만톤) ○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안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지채소(550천톤), 시설채소(210), 과실(210) ○ 소비관측(4월) 및 선행관측 시범사업(9월) 	<p style="text-align: center;">완료</p> <p style="text-align: center;">완료 추진중</p> <p style="text-align: center;">추진중</p> <p style="text-align: center;">완료</p> <p style="text-align: center;">완료</p>
10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가. 농어촌 뉴타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 선정(1월) 및 세부설계 등 사업 추진 중 * 충북(단양), 전북(장수 고창), 전남(장성·화순) 	<p style="text-align: center;">추진중</p>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다. 딸감 보급 및 Green Heart 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목보일러 보급 완료(9월말, 3천대) ○ 농·산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딸감 집중 지원(10월~2월) ○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 	완료 추진중
라. 식품·외식업체 경영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 가공시설(공동조리시설 72억, 가공시설 현대화 700억원) 지원 ○ 식품·생산·유통·가공·소비 관련 통계 및 정보제공(12.14) 	완료
마. 귀농·귀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종합대책 마련 및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치(4월) ○ 귀농귀촌 사업지침 개정(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단가 조정, 귀농기준일 완화, 인턴 근무시간 적용 등 	완료
12 농어촌 산업 활성화		
가. 농어촌 향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활력증진계획 조기승인('08.12월) 및 사업 추진 ○ 농공단지 조성 관련 규제완화 및 지원조건 개선(2월) 	완료
나. 농어촌 체험·관광산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마을, 테마공원, 교육농장, 산림휴양시설 등 총 314개소 신규 조성 ○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7월), 농어촌 체험이야기 공모(10월) ○ 농산어촌 체험·관광 추진 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장 지원단가 증액 및 채용 확대 ○ 산음 치유의 숲 개장(1.30) 	완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마. 재정조기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식품분야 주요사업 상반기 계획 대비 98.4% 집행 * 전체재정(14조115억원)의 59.1% 해당 	완료
바.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분야) 11월말까지 09 전체계획 대비 92% 달성 * 115,894명 /126,124명 ○ (산림분야) 12월말까지 09 전체계획 대비 100.4% 달성 * 연인원 14,715천명/14,652천명 	추진 중
사. 자본확충 위한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개정(5.27 공포, 11.28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농지 규제완화, 비농업인 상속농지의 농지은행 임대위탁한도(2ha) 폐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완화 등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여건불리농지」 고시절차 규정 - 수도권 산업단지 2년간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폐지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등 	완료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2009. 12. 30.

‘녹색기술 청색마을 함께하는 농촌진흥’



농촌진흥청

순 시

I. 2009년 추진실적 평가	117
II. 2010년 업무추진 방향	119
III. 녹색비전 실현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보급	120
1.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120
2.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122
3. 미래준비 농업녹색기술 개발	123
4.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국격제고	124
5. 농촌 활력화 및 현장중심의 기술보급 강화	125
IV. 주요 세부과제 실천계획(Action Plan) ...	126

I. 2009년 추진실적 평가

1. 성과

□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생활공감형 농업녹색기술 개발

○ 생물자원의 소재산업화 및 첨단분야 융복합에 역점

* 실크단백질 이용 인공고막, 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돼지(지노), 채소접목로봇 등

○ 농업현장 실용화 및 농식품안전관리기술 개발

* 우유품질분석기, 한우판별 진단기술, 가축분뇨 악취제거장치, 다이어트용 감귤쌀 등

○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용 및 기능성 품종 보급

* 포장밥용(주안벼), 전통주용(설갱벼), 발아현미용(큰눈벼), 임산부용(철분강화, 고아미4호)

○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작물 재배법 개발 * 망고, 아티초크 등 13종

□ 미래준비·역량 강화 토대 구축

○ 농촌진흥청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수립(6분야 20개 세부과제)

* 「제1회 생활공감 녹색기술 대전」 개최(4.30~5.2) : 국민생활공감형 녹색기술 발굴 확산

○ 자립형 복지농촌 실현을 위한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전개

* 시범마을 육성(276마을), 농업인 실천 결의(94천명)

□ 기술적·제도적 분야를 망라한 농업인 현장으로 해소 추진

○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녹색기술현장지원단」 운영(3.17출범)

*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팀으로 구성, 복합기술민원 현장해결(167건 처리)

○ 농업·농촌현장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 추진(65과제)

* 영농현장의 농업인 의견을 직접 수렴, 과제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

□ 개도국 농업기술공여 확대 등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한국 주도 최초의 다자간 농업기술협력 협의체인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 이니셔티브(AFACI)」 출범(11.3, 12개국)

* AFACI(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개도국 현지맞춤형 농업기술지원을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신설 운영(6개국)

* 현지 농업자원 공동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지원·교육

- 국제유전자원협력훈련센터 개소 및 한반도 원산 토종자원 반환

* 반환실적(4,422점) : ('09)독일901 ('08)일본1,546, 러시아296 ('07) 미국1,679

□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능·조직 선진화」 기틀 마련

- 미래를 대비하고 현장·수요자에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개편

* 농식품자원부, 바이오에너지·온난화대응연구센터 등 설치

- 연구 어젠다체계, 지역특성화사업체계 도입 등 목표 지향적 사업체계 구축

* 일하는 방식 개편 : 열린연구·현장연구·실용연구·미래연구 지향

-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

□ 경제위기 극복과제 추진

- 일자리 창출 : 11,501명 고용 중('08채용 고용유지 8,002, '09신규 3,499)

- 취약계층지원 자율모금운동 : 「푸른농촌 희망찾기 성금」 (446백만원)

◇ 정부기관 평가에서 22개 분야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2년('08,'09) 연속 7건씩 선정

2. 반 성

-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등 현장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구개발·보급 성과가 미흡

- 쌀 가공기술, 돌발병해충 조기방제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술 개발이 부진

-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 방지 관리체계가 미흡

- 환경 보전 및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식품 수요에 부응한 자원 순환형 친환경 유기농업기술 개발·확산이 미흡

II. 2010년 업무추진 방향

세계 일류 선진농업기술강국 달성

전략목표

현장실용

미래준비

국격제고

농촌활력

핵심과제

경쟁력
제고

- 농업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 로열티 대응 품종개발
- 품목별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 쌀 수급안정 기반기술 (수출촉진 지원)

친환경
안전

- 농업용 자재 안전관리
- 농식품 안전관리기술
- 자원순환 유기농업기술 확산

미래
준비

- 생물자원 소재산업화기술
- 농업생명공학기술
- 첨단분야 융복합기술
- 기후변화 대응기술
- 기능성 식품 개발
- 유전자원 활용기술

국격
제고

-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KOPIA / AFACI)
- 한식 세계화 기초연구·기술 개발 및 식문화 전파

농촌
활력

- 농외소득 및 지역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확산
- 농업인력 육성
- 농촌현장 애로해소
- R&D·기술보급 효율화

녹색기술 개발로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뒷받침

Ⅲ. 녹색비전 실현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보급

1.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 생산비 절감, 수출 촉진 등 품목별 경쟁력 확보 및 쌀 수급 안정기반기술 개발

- 농업에너지, 가축 사료비, 농자재 등 농가경영비 부담이 큰 요소에 대한 비용절감기술 중점 개발 보급
 - 역새 등 자생식물의 에너지화, 미생물 연료전지, 지열, 수자원, LED 등 친환경에너지의 농업적 이용 확대
 - * 지열난방체계의 비용절감, 축열 효율성 향상 등 보완기술 개발
 -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생산, 지역·계절별 조사료 연중 생산 체계 등 고품질 조사료 안정생산기술 개발 보급
 - 농경지 토양지도 이용 맞춤형비료 생산, 합성농약 대체, 천적 개발 등으로 화학비료·농약 대체 및 절감
- 로열티 경감을 위한 국산품종 개발 및 국제기호성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개발
 - (로열티) 장미, 딸기 등 로열티 부담이 큰 품목 집중 육성
 - * 목표 : 6품목 60품종(딸기 5, 장미 15, 국화 12, 난 15, 참다래 3, 버섯 10)
 - (과수) 국제기호성 우량품종 육성 및 최고품질과실 생산체계 구축
 - * 최고품질 과실 「탐프루트」 생산기술 보급 : 6과종 92개소 2,001ha
 - (채소) 수출용 딸기, 토마토의 저장성·수송성 증진기술 개발
 - (화훼) 난류, 나리, 장미, 국화 등 수출 품종의 연중 안정생산체계 확립
 - (인삼) 유기재배 및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안전생산기술 개발
 - (수출지원기술) 수출국별 농약안전사용, 파프리카 착과율 증진, 절임배추 저장기간 연장 등 맞춤형 기술 개발

□ **고부가 축산 가공품, 무항생제 가축 생산기술 개발 등으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 **(한우) 고급육 생산 기술 및 한우판별용 이동형 진단시스템 보급**
* 한우/수입우 판별 유전자 분석기법 : 판별률 99% 이상, 진단시간 단축(3일→3시간)
- **(젓소) 기능성 우유, 자연치즈 등 유가공산업 활성화기술 개발**
* 혈액순환 개선(나토키나제), 아토피 경감(감마리놀렌산) 등 기능성 우유
- **(돼지) 신품종 돼지 종돈 및 생산성(MSY) 향상기술 개발**
* 한국형 씨돼지 '축진듀록'과 '축진츰돈'을 교잡하여 차세대 실용돼지 개발
- **(닭) 국산종계 산업화 및 부분육 생산 대형육계 사양기술 개발**
* 성장단계별 사료급여기술, 질병을 조기 판별할 수 있는 '질환식별 닭' 개발 등
- **(축산물) 항생제 사료첨가 전면금지('12) 대비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 **쌀의 다양한 가공기술 및 식량 자급률 향상기술 개발**

- **밥쌀용, 가공용 등 용도별 맞춤형 벼 품종 개발**
* 최고품질 밥쌀용, 어린이용(고칼슘), 치매 예방용(카테킨, 레스베라트롤)
- **다양한 가공식품 및 비식용 산업소재 개발로 신수요 창출**
* 편의식품, 막걸리 등 전통주, 밀가루 대체 쌀가루, Rice Paper, 화장품 소재 등
- **콩, 조사료 등 발작물의 논 재배 안정생산기술 개발**
* 내습성(耐濕性) 품종 선발, 물관리기술 개발 등
- **밀 등 자급률이 낮은 식량작물의 재배확대기술 개발**
* 품종 조숙화, 작부체계 개선, 생력기계화, 생산 단지화

□ **개발기술의 조기 보급 및 현장 실용화 촉진**

- 현장기술 수요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영농현장(On-Farm)연구**」 확대
- 기술가치 사전평가, 패키지 기술 제공 및 농업기술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등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운영 활성화

2.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 농자재 및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국내외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 농식품 생산 공급

□ 농업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강화

○ 농업용 자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농약외품 관리제도·유기농자재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비료 품질 등급화 시행

○ 부정불량 농자재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EU, 미국 사용금지 농약(158종)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 불법유통 농자재 취급자에 대한 벌칙 등 처벌기준 강화

○ 농업용 미생물자재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 병해 방제용 유용미생물 개발(10종) 및 시판 미생물의 안전성 검증기술 마련

□ 농식품 안전관리 및 위해요소 관리 강화

○ 수출국가별 맞춤형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교육 강화

○ 농식품 위해요소 위험평가기술 개발 : 중금속, 유해미생물, 독소 등

○ GAP(우수농산물관리) 실천 현장교육 및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적용 가축사양관리기준 확대

○ GMO 환경 위해성 심사 강화 및 표준관리 시스템 구축

□ 자원 순환형 친환경 농업기술의 확산

○ 작목별 유기농업기술개발 및 가축분뇨 자원화 등 자원순환형 농업기술 개발

○ 천적자원, 바닷물 이용 등 병해충 방제기술 현장실용화

○ 작목별 유기재배 매뉴얼 및 축종별 표준사양지침서 제작·보급

○ 국산 녹비작물 종자증식 면적 확대 : ('09) 60ha → ('10) 2,000

3. 미래준비 농업녹색기술 개발

◇ 생물자원 이용, 신기능·신소재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로 신성장동력 창출

□ 생물자원을 이용한 신기능성 식·의약 소재 개발

- 누에(인공뻘, 조혈촉진단백질), 소똥구리(항진균 물질) 등 곤충과 미생물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 누에 : ('09) 인공고막(고막재생률 37% 향상) → ('12) 치주뻘 등 4종

- 감귤, 잡곡 등을 이용 인공피부, 바이오 화장품, 천연색소 개발
- 농식품 자원의 기능성 탐색(항암, 면역증진 등) 및 소재화

□ 농업생명공학·융복합기술 개발로 첨단분야의 농업적 활용 확대

- 환경친화적 고부가 GM작물 개발 * 병충해저항·기후변화대응 작물 등
- 형질전환 동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신약·장기 생산기술 개발 강화
* 혈전치료제 등 바이오신약, 인체면역거부가 없는 장기(臟器)생산, 백신사료 등
- 외래농산물, GMO 등 DNA 마커를 이용한 농축산물 판별기술 개발
- 수직형식물공장시스템, 제초로봇 등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 개발

□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국가 종합관리 능력 강화 기술 지원

- 농업부문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및 배출 감축기술 개발
* 작물재배, 반추동물 장내발효 및 가축분뇨 처리과정의 저감기술 개발 등
- 재배적지 변동, 신소득작물 재배법 등 농업환경변화 대응연구 강화
- 꽃매미 등 돌발 병해충 발생 대응 조기에찰시스템 구축('10~'14)

□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기반 구축

- 육종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 육종기반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국가간 자원협력 강화를 통한 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해외유출 토종유전자원의 반환 추진 등

4.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국격제고

◇ 개도국 농업기술공여 확대, 기술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상호 호혜적인 농업기술협력체제 정착

- 아시아지역 농식품 기술협력 선도를 위한 「아시아농식품 기술협력 이니셔티브(AFACI)」 본격 운영
 - 국가별·권역별·범아시아 농업기술 개발·지원 프로젝트 수행
 - 실시간 기술지원 및 정보교류를 위한 “아시아 농업정보센터” 구축
 - 아프리카 ‘MVP’(새천년마을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아시아형 사업 추진
 - * MVP : 유엔 및 선진국 주도, 아프리카 10개국 80개 마을의 빈곤퇴치 사업
- 개도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공여 확대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설치 확대 : (‘09) 6개국 → (‘10) 10
 - 자원 개발형 시범농장과 맞춤형 훈련제공으로 새로운 지원모델 확립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인턴 파견 : (‘09) 65명 → (‘10) 85
- 농업분야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및 농업과학기술 교류협력 강화
 - 국제공동농업현안에 대응한 주요 국제농업기술회의 유치
 - * 아시아식량비료기술센터 국제워크숍(6월), 아태농업연구기관협의회 총회(10월)
 - 「녹색기술국외자문단(1,721명)」을 활용한 첨단기술 및 정보수집 강화
- 한식의 세계 명품화 기술 개발 및 한국 식문화 확산
 - 한식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전통음식 발굴 및 조리법 표준화
 - * 전통향토음식 용어사전(영문), 실용조리서(3종), 한식조리법 표준화(100종)
 - 권역별 기호도 조사로 맞춤형 조리법 개발(아시아·유럽권 3개국)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활용, 식문화자원 발굴 및 홍보 강화

5. 농촌 활력화 및 현장중심의 기술보급 강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가공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농특산물과 어메니티를 접목한 농촌경제 활력화 촉진

-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녹색식생활 체계 구축 지원
 - *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연계방안 강구 및 향토음식연구회 활성화
- 지역여건에 맞는 주산작목 중심의 지역특성화사업 추진(83개소)
- 손맛사업(18개소), 향토음식자원화(15개소), 농촌교육농장 조성(64개소)
- 지역별 특화작목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생산품 브랜드화, 교육을 위한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단」 운영(63개소)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2단계 확산대책 추진

- 농업인의 자립적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쾌적한 농촌 실현 자율운동 확산
- 운동 주체를 농업인학습단체에서 농업계 및 민간단체로 확대
- 신기술 우선 보급을 통한 선도 시범마을 육성 프로그램 모델 개발

□ “기술+경영(e비즈니스)”을 융합한 맞춤형 교육 확대

- 귀농·귀촌인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맞춤형교육으로 성공적 정착 지원 * 야간귀농교육(200명), 제대군인 등(100명), 귀농인 정착교육(40개소)
- 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경영체 e-비즈니스 지원 강화
- 생활공감형 현장 중심의 「신기술 시범사업」 확대(55종) 및 「녹색기술현장지원단」 활성화 등 지원체계 강화

* ‘시니어자문단’(농진청 지역인적네트워크)과 연계, 애로기술 직접 지원

□ 농업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의 효율성 극대화

- 현장중심의 목표관리, 경쟁체제, 수요자중심 평가 등으로 실용연구 강화
- 지도기관 중심에서 대학, 선도농업인 등과의 협력으로 기술보급 활성화

IV. 주요 세부과제 실천계획(Action Plan)

	주요 세부과제	일정
1/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신기술보급시범사업과제 선정심의회 ▪ 비료 공정규격 개정 ▪ 양잠농가 실태조사(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법 시행관련)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 고독성 농약 재평가 추진 ▪ 딸기 수확기 주산단지 현장 컨설팅 ▪ 해외상주연구원 및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사업평가회 ▪ 아시아농업기술협력 이니셔티브(AFACI) 프로젝트 선정 ▪ 글로벌 해외인턴 파견 	1월 1월 1월 1~2월 1~6월 2월 2월 3월 3월,8월
2/4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발병해충 및 외래잡초 동정·모니터링 ▪ 정부지원 비료 품질등급 설정 및 지원대상 선정 ▪ 탄소이력 추적을 위한 주요농산물 전과정 평가 수행 ▪ 제2회 생활공감 녹색기술대전 개최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선도지도자 교육 ▪ 제대군인 귀농교육 및 농업창업교육 ▪ 아태지역식량비료기술센터(FFTC) 국제워크숍 ▪ GAP 농업위원회 개최 ▪ 실크인공고막 임상실험 추진 	4월 4월 5월 5월 5월 4~11월 6월 6월 6~12월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외품' 관리제도 시행 ▪ 차년도 지역농업 특성화시범사업 대상시군 선발 ▪ 제6회 전국생활원에 콘테스트 ▪ 아태지역농업연구협의회(APAARI) 총회 ▪ 주요 농산물 탄소성적 DB 구축, 돌발병해충 예찰모형 개발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시범 도입 ▪ 농업부문(경종,축산)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작성 ▪ 위성정보를 이용한 주요곡물 작황 해석 표준프로세스 개발 ▪ 농업미생물에 대한 농가 신뢰도 모니터링 ▪ 한식 실용조리서(3종), 전통향토음식 용어사전(영문) 발간 	7월 9월 10월 10월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12월
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인증심사원 교육 ▪ 부적합 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삭제 ▪ GAP 관리기준 고시 개선 ▪ 농약 직권등록(설계심의-직권시험 수행) ▪ 유통 농자재(농약,미생물,비료,유기농자재) 시료점검, 사후관리 ▪ 「녹색기술현장지원단」 현장 애로기술 지원 	분기별 분기별 연중 연중 연중 연중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구현

2009. 12. 30.



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산 시

I. 2009년 산림정책 성과와 반성	131
II. 2010년 여건 전망과 정책방향	132
III. 주요 추진과제	134
1.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134
2.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135
3. 산림생태계의 효율적 보전	136
4.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137
5. 서민체감형 산지이용 합리화	138
6. 해외 산림자원협력 강화	139
IV. 과제별 주요일정	140

I . 2009년 산림정책 성과와 반성

□ 산림부문 녹색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

○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중 2번째로 큰 일자리 창출

- '09년 1조1천억원을 투입, 연인원 1,465만명 고용(상시인원 63천명)

* 4년간('09~'12) 3조2천억원을 투입하여 20만명 고용할 계획

○ 산림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09년 40개 중앙부처 대상 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산림자원의 에너지활용 기반 구축

○ 숲가꾸기 산물수집을 확대하고 목재펠릿 제조기반 마련

- 산물수집 : ('08) 65만m³ → ('09) 80만m³/제조시설 4개소 신설

○ 농산촌 펠릿보일러(3천대) 보급, 펠릿 혼소발전(동해화력) 및 군부대(3개소) 시범사업 추진

□ 다양한 해외 산림자원외교로 국가위상 제고

○ 아시아 최초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11년) 유치

○ 우리나라 주도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 합의

○ 정상외교를 통해 인니, 캄보디아에 조림 대상지 40만ha 확보

* '93년이후 9개국에 20만ha 해외조림중('09. 11월말)

□ 봄철 장기간 가뭄으로 산불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

○ 산불발생 현황 : ('08) 389건, 227ha → ('09) 560건, 1,375ha

○ 국가정책조정회의(5월)에서 범 국가차원의 산불대응대책을 마련하여 총력 추진 중

Ⅱ. 2010년 여건 전망과 정책방향

1 | 여건 전망

□ 유일한 CO₂ 흡수원인 산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고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조립 등 산림의 중요성 부각

* 중국, 인도 등 8개국에서 10건 탄소배출권 조립등록중(유엔기후변화협약, 09.12)

○ 유럽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시장 확대

* 세계 펠릿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8%증가, 향후 연간 30%이상 확대전망(FAO)

○ 국내적으로도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규정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걸맞는 산림부문 역할 증대

○ '09년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개도국 지원(ODA) 요구 증가

* 산림부문에서도 인니, 미얀마, 중국, 몽골 등 4개국에 산림녹화 지원

○ G-20정상회의 개최로 분야별 국격제고 방안 논의 추진

○ 북한 황폐산림복구를 위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

□ 녹색일자리 및 산림휴양·복지 수요 증가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녹색일자리 요구 지속

○ 웰빙 등 삶의 질 제고에 따라 청정임산물 및 휴양수요 증가

○ 산림치유, 등산, 도시숲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림 이용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산림복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 증가

*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지수는 OECD국가중 25위에 불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전략목표

선진한국에 걸맞는
산림품격 제고

녹색산림자원을 통한
국민행복지수 증진

국제산림협력 주도로
국가위상 강화

추진과제

-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 산림생태계의 효율적 보전
-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 서민체감형 산지이용 합리화
- 해외 산림자원협력 강화

국민과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녹색산림행정 구현

Ⅲ. 주요 추진과제

1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

- (수종갱신) 녹화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림을 대대적으로 벌채하고 백합나무 등 속성수로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 바이오순환림은 펠릿원료 공급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집단화·단지화**하여 '20년까지 100천ha 조립('10년 6천ha)

< 임목생장량 m³/ha/년 >

수 종	백합나무	낙엽송	소나무	상수리나무
생장량	11.3	6.7	5.3	5.2

- (경제수 조립) 유휴토지 조립으로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수조립으로 목재수요에 대처
 - 기후·토양·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산림지도**를 활용하여 21천ha, 36백만그루 조립

□ 산림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선진한국에 걸맞는 산림경관 창출

- 주요 고속도로변, 가시권의 **덩굴류 집중 제거**로 산림생태환경과 경관 개선
- **숲가꾸기 확대**로 숲의 건강성 증진, 우량목재 육성 및 녹색일자리 창출

* 숲가꾸기기간('09~'13)동안 숲가꾸기 125만ha, 산물수집 650만m³, 일자리 창출 202천명



<전남 장성 편백 명품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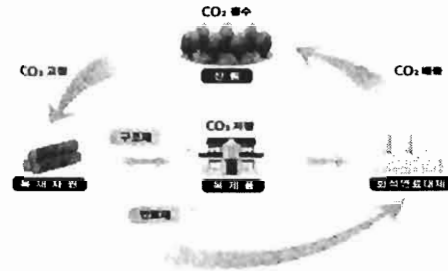
2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 원활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일관시스템 구축

○ 숲가꾸기 산물수집을 확대하여 에너지원으로 공급

숲가꾸기(23만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벌률 : 20 → 35% · 10ha이상 규모화
산물수집(110만m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률 : 20 → 35% · 기계화 : 15 → 30%
산물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50%, 농업용 30% · 에너지용 20%
목재펠릿(18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보급 · 지역단위 유통망 구축

<산림바이오매스 일관시스템>



<산림의 탄소순환 체계도>

○ 산림바이오매스 일관시스템을 활용한 탄소순환마을 조성(1개소)

□ 목재펠릿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수급관리

○ 목재펠릿 제조시설 8개소 신설('10년말 총생산능력 年 20만톤)

* 원료와 수요처를 고려하여 '12년까지 총 40만톤 규모의 생산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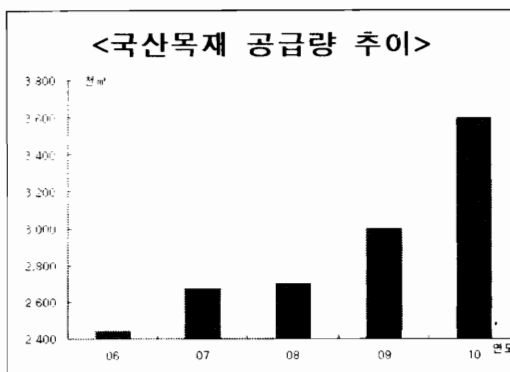
○ 농산촌 주택 목재펠릿보일러 4천대 보급

- 가정용 펠릿보일러 : ('09) 3 → ('10까지) 7 → ('12까지) 39천호

○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 표시제를 도입하고 부가세 감면 추진

□ 국산목재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목재자급률 제고

○ 일정규모 이상 벌채시 적정분수의 나무를 존치하는 친환경 벌채제도 도입 및 국산목재 저장센터 설치(시범사업 1개소)



<국산목재 공급목표>

- 목재자급률 : ('09) 11.6 → ('10) 13.0%
- 국산재공급량 : ('09) 3.0 → ('10) 3.6백만m³
- 한옥용 자재공급 : ('09) 4 → ('10) 10천m³
- 사랑의 땀감 : ('09) 11 → ('10) 15천세대

3 | 산림생태계의 효율적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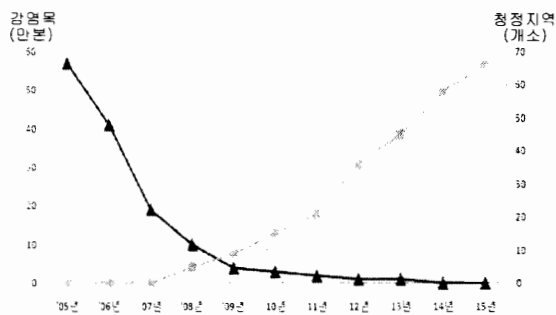
□ 산림보호체계 개선 및 우수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강화

- (산림보호법 시행)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관리 효율화(3.10일부터)
- (백두대간) 산림훼손지 복원(9ha) 및 고산수목원 설계 실시
 - * 고산수목원('09~'13) : 경북봉화, 5,179ha, 2,300억원 투자
- (DMZ 일원) 산림생태계 복원(41ha) 및 평화의 숲 조성 추진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최소화

- (산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산불대응력보강대책** 이행
 - 산불 요인 사전제거, 헬기공조 투입, 산불방화 검거팀 운영 등
- (산사태) 재해취약지역의 사방사업을 통해 **수해피해 예방**
 - 사방댐 695개소, 계류보전사업 61km, 산지사방 105ha 등 1,795억원
 - 산불진화 취수원과 가뭄시 용수제공을 위한 물가두기 사방댐 조성(10개소)
- (병해충) '13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 방제하고 **산림 병해충별 맞춤형 방제 실시**

* 산림병해충 발생면적 : ('06) 390천ha → ('07) 372 → ('08) 353 → ('09) 29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및 청정지역 지정>



<사방댐>

4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 서민·생활체감형 산림휴양·치유 서비스 제공

- 태교의 숲 숲유치원 산악레포츠단지 등 휴양·체험시설 설치·운영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 및 법적근거 마련
 - 치유의 숲 운영(3개소),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설계 추진
 - * 테라피단지('09~'14) : 경북 영주·예천, 3,500ha, 3,266억원 투자

□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국민행복지수 증진

- 도시 및 주거지역 녹색공간 조성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 도시숲·산림공원(261개소), 학교숲(109개소), 가로수(571km) 조성
 - * '13년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1인당 도시녹지면적(9.0㎡)을 확보(현재 7.4㎡)
 - 새만금내 도시숲·가로수·방수제 숲길 등 조성 기반마련
- 전국 숲길의 네트워크화로 도보중심의 새로운 산행문화 창출
 - ('09까지) 146km → ('10까지) 360km → ('12까지) 1,160km

□ 임업인 소득 증대 및 경영기반 확충

- 고소득 작목인 산양삼의 품질표시 및 생산이력제 도입
 -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상반기)
- 임산물 주산단지 위주로 산지종합유통센터 확대 설치
 - ('09까지) 36개소 → ('10까지) 46개소 → ('12까지) 70개소
- 경영모델숲(10개소) 조성, 임야양도세 감면 등 임업인 지원

5 | 서민체감형 산지이용 합리화

□ 산지이용규제 합리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 (중복규제 완화) 타 법령에서 공익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의 중복규제를 삭제
- (진입로 개설) 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시설과 기존 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 허용
- (지목 현실화)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 계획적·합리적 산지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산지관리계획) 체계적 산지이용을 위한 계획제도 도입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산지전용의 적합성·환경성 사전 검토
- (산지일시사용)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절차를 간소화

□ 국유림을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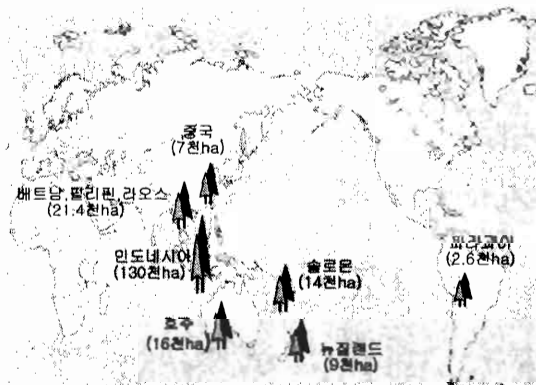
- (국유림 사용허가) 국유림을 지역특화 사업, 약용수종 재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산물 무상공급) 국유림내 숲가꾸기 산물을 농산촌 연료 등 자가소비용으로 무상 공급

* '08년부터 겨울철(10~2월) 농산촌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난방연료 5m³를 무상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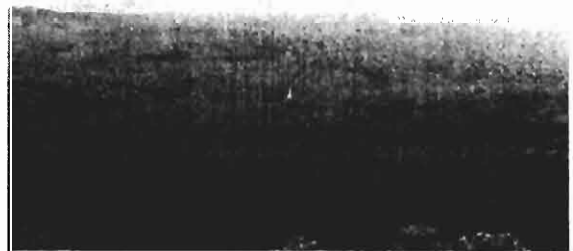
6

해외 산림자원협력 강화

- 산림자원외교 다변화 및 조림투자기업 지원 등 해외조림 확대
 -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산림자원외교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산림자원 확보 및 ODA 지원사업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09년 정상회담시 확보한 인니, 캄보디아(40만ha) 조림사업 추진
 - 인니 2만ha 조림 추진, 캄보디아 20만ha 투자환경조사
 -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확대(조림지 매수 등 신규지원)
- 산림분야 국제협력 주도로 국가위상 제고
 - '11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추진
 -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총회 개최(8월, 서울)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11년) 준비
-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 단계별 북한산림복구 세부계획 수립
 - 지난 10년간 북한 황폐지 면적 74% 증가('08년 284만ha)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탄소배출권조림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해외조림 진출현황>



<해외조림 - 인도네시아>

IV. 과제별 주요일정

	실천 과제	일정
1/4 분기	· 지역별 숲가꾸기 및 녹색일자리사업 발대식	1월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대상자 선정	1월
	· UNCCD 총회 기본계획 수립	1월부터
	· 목재펠릿 제조시설 기본·실시설계 추진	1월
	· 북한 탄소배출권조림 능력배양프로그램 운영	2월부터
	· AFoCO 설립추진단 구성	2월
	· 해외조림투자 설명(남미, 캄보디아)	2~3월
	· 바이오순환림 조성, 유희토지조림 등 봄철 나무심기	3~4월
	· 임도, 사방사업, 산림복원 등 산림사업 계약체결	3월
	· 탄소순환마을 설계 추진	3월
· 봄철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1~5.15	
2/4 분기	· 제65회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	4월
	· 저탄소녹색성장 심포지엄 개최	5월
	· 목재펠릿품질규격 의무표시제 도입	6월
	· 태교의 숲 시범대상지 선정 및 조성	6월
	·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설계 추진	6월
	· 산지제도의 개편을 위한 산지관리법 개정	6월
	· 사막화방지의날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6월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국·내외 서명 및 비준 추진	2~9월
	·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 상황관리	5.15~10.15
하반기	·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설계추진	7월
	· 가을철 나무심기 및 덩굴류제거 등 조림지사후관리	9~11월
	·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총회 개최	8월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국회비준	9월
	· 숲길 조성구간 개통	10월
	· 전국 산불진화 합동훈련	11월
	· 목재펠릿 품질인증제 도입	12월
	· 임도, 사방사업, 산림복원 등 산림사업 준공 및 평가	12월